

정책토론회

청년 실업자 채용 촉진을 위한

# 고용장려금 도입방안

- 일시 : 2004년 10월 28일(목) 14:00~16:00
- 장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제1회의실
- 주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행 사 일 정

13:30

등 록

14:00

개 회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14:10

주제발표

사회: 장덕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제발표

- 청년실업자 채용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 도입방안
- 정병순 · 변미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14:40

토론 및 질의응답

- 강성근(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장)
- 김상환(노동부 고용정책과 사무관)
- 김영수(한국벤처기업협회 기획관리실장)
- 김태운(잡코리아 전략사업본부 총괄이사)
- 백필규(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오규덕(잡링크 경력개발센터장)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청년실업자 채용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 도입 방안

정 병 순 · 변 미 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I. 연구의 개요
- II. 고용보조금 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
- III. 국내외 고용보조금 제도
- IV. 서울시 고용여건 및 전망: 고용보조금의 정책환경
- V. 서울시 청년층 실업실태 및 기업체 정책수요 조사
- VI. 서울시 고용보조금 도입방안

빈 면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o 1997년 외환위기 도래한 이후, 급상승하였던 서울의 청년실업률이 한때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10%를 상회할 정도로 상승하는 등 고용사정 전반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 o 청년실업의 급증은 경기침체와 같은 경기적 요인이 작용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노동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청년층 노동인력에 대한 수급상의 불일치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o 청년실업은 실업자 개개인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o 이처럼 급증하는 청년실업 문제를 놓고 청년실업자의 취업능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채용을 촉진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공부문이 노동시장을 조정·중재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야 함
- o 본 연구에서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용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함

## 2. 연구의 목적

- o 본 연구에서는 노동수급 불일치로부터 유발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고용장려금(보조금)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신규인력의 채용에 따른 경영상의 부담을 갖고 있거나, 인력채용시 경력직을 선

호하는 노동수요측(기업)에 대해 청년층의 고용을 장려하고,

-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을 기피하거나 기업의 경력자 선호로 인해 구직상의 애로를 가지고 있는 노동공급측(청년구직자)에 대해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취약한 구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 신규 청년층에 대한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고용보조금의 도입가능성과 그 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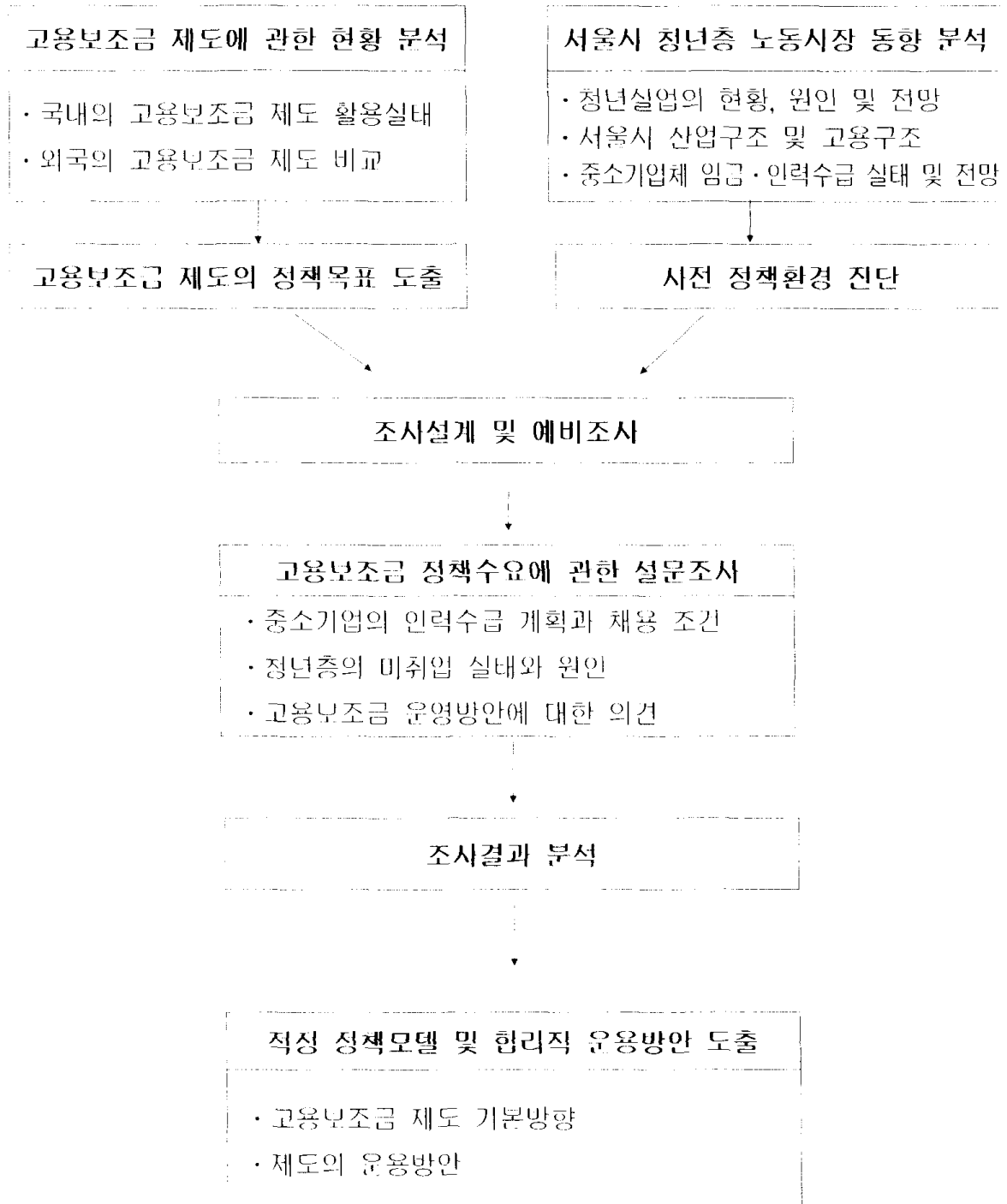
o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고용보조금에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과 아울러, 서울시 청년층 고용실태와 고용보조금에 대한 정책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함

- 현행 서울시 고용환경과 취업여건에 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함
- 기업측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채용인력에 대한 수요와 채용패턴을 확인하는 동시에, 고용보조금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분석함
- 다른 한편으로, 청년층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행태 및 선호를 파악하는 동시에, 고용보조금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분석함
- 상기 통계자료 분석과 기업 및 청년층 조사를 통해 적절한 고용보조금 제도화 방안을 도출함

o 연구의 기대효과

-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일차적으로 현행 서울시 청년층의 고용여건과 구직실태를 파악하고, 청년층 실업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음을 물론,
- 객관적 조사·분석에 기초하여 고용보조금 제도의 운영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청년 실업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3. 연구의 체계



## II. 고용보조금 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

### 1. 실업의 주요 특성

- o 경기적 요인, 마찰적 요인, 계절적 요인, 구조적 요인 등으로 대별되는 실업은 20세기 후반 경제시스템의 전환과 고용여건 및 채용패턴의 전반적 변화로 인해 구조적 실업이 확대·심화되는 추세임
- o 현대적 실업이 유발되는 양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이 핵심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 현대적 실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식기반화, 기업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노동시장의 분단화가 강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과 실업이 계층화되는 양상을 나타냄

<표 1> 실업의 계층별 특성

(단위 : 천명, %)

구분 \ 연도		2000	2001	2002	2003
전체		913 (4.1)	845 (3.8)	708 (3.1)	777 (3.4)
성별	남성	613 (4.7)	561 (4.3)	467 (3.5)	487 (3.6)
	여성	300 (3.3)	284 (3.1)	241 (2.5)	289 (3.1)
연령별	15~29세	402 (7.6)	388 (7.5)	341 (6.6)	383 (7.7)
	30~39세	217 (3.4)	193 (3.0)	177 (2.8)	182 (2.9)
	40~49세	180 (3.3)	162 (2.8)	111 (1.9)	128 (2.1)
	50~59세	88 (2.9)	79 (2.6)	56 (1.8)	66 (2.0)
학력별	중졸 이하	227 (3.3)	192 (2.9)	138 (2.1)	122 (2.0)
	고졸	471 (4.8)	433 (4.3)	358 (3.5)	411 (4.1)
	전문대졸 이상	216 (4.0)	221 (3.8)	212 (3.5)	243 (3.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실업의 계층화와 더불어, 과거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과 경기적 요인에 의해 단기적 실업이 발생하던 것과 달리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실업의 계층화와 장기화가 맞물려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됨

※ 실업의 장기화와 장기실업자

- 장기실업자란 일정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다만, 많은 국가에서 장기실업률을 보고함에 있어서 **12개월과 아울러 6개월 기준을 동시에 사용**
-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고용흡수력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실업이 장기화되다가, 다시 경기가 반전되어도 **단기실업자나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장기실업자보다 우선 고용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초래됨**. 다만 경기호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만 비로소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감소함
  - 실업의 장기화가 유발되는 원인으로는 숙련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실업자군에서 탈출할 것으로 인식하여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낙인효과(heterogeneity effect)가 작용
  - 장기실업자는 적응력과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보유한 기술을 대부분 상실했을 것으로 간주됨(duration dependence effect)
- 따라서,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상황에서 벗어날 확률은 더욱 낮아지므로, 장기실업으로 이행하기 전에 실업탈피를 위한 고용여건을 지원해야 함

<표 2> 청년층 대 중장년층 실업률 국제비교: 2003년 현재 (단위: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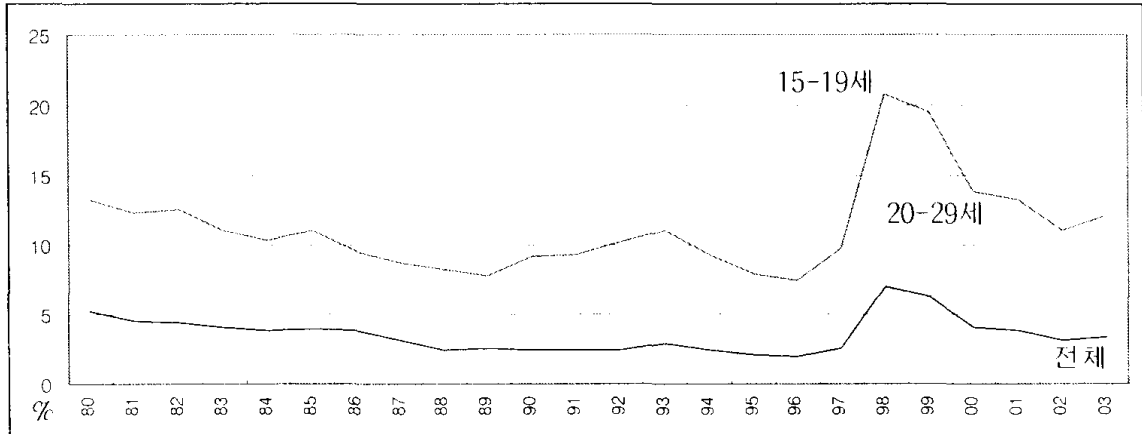
	한국	일본	미국	EU 15개국	OECD 회원국
청년층 실업률 (15-24세)	9.6	10.2	12.4	14.7	13.3
중장년층 실업률 (25-54세)	3.0	4.7	5.0	7.0	6.0
배율 (청년층/중장년층)	3.2	2.2	2.5	2.1	2.2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측의 여러 요인에 의해 초래되고 있는 바, 노동수급간의 불일치(mismatch)가 근본적인 요인임
  - 고용시장의 수요측 요인으로는 경제의 성장속도 둔화와 고용흡수력 저하를 지적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과거 주요 고용흡수처였던 대기업의 청년노동력 수요감소와 경력직 선호가 다른 중요한 요인임
  - 고용시장의 공급측 요인으로는 우선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대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즉 대졸인력의 과잉공급을 지적할 수 있고, 특정 직종 및 업종에 대한 청년층의 일자리 선호가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 서울의 청년실업

- 국내 청년실업의 주요 현황 및 추세
  -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인 높은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의 2배 이상에 달하고, 더욱이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는 양상을 보여 실업문제의 핵심으로 대두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1> 한국의 청년실업률 추이: 1980-2003년 (단위: %)

- 실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80년 이래 꾸준히 하락하던 청년실업률은 98년 11.9%를 기록한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2년 6.6%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시 상승하여 2004년 1.4분기에는 8.9%를 기록하고 있음
- 청년층 실업문제를 악화시키는 다른 요인은 실업률의 양적 증가와 함께,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저하임
- 최근 들어 고졸 및 대졸 취업자의 진로 비중에서 관리·전문직과 기술직 등,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의 비중이 줄고, 그 대신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늘고 있음
  - 서비스·판매 종사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월급여총액은 전직종 평균보다 20-60만원 적고, 근로시간도 36시간 많음

&lt;표 3&gt; 대졸 및 고졸 취업자 진로 비중

(단위: %)

구 분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대졸 취업자 진로 비중	관리·전문직	31.0	28.4	26.2	28.6	30.1	27.5
	기술직	21.1	21.7	22.8	20.1	20.4	19.6
	사무직	27.6	29.3	32.2	29.6	28.1	27.8
	서비스·판매 관련직	9.9	11.0	10.4	10.2	10.9	15.7
	생산 관련직	6.0	5.5	4.7	7.6	7.5	6.4
	단순노무직	0.6	0.8	0.7	1.0	0.8	1.0
	기타	3.8	3.4	3.0	3.0	2.1	2.1
고졸 취업자 진로 비중	관리·전문직	1.4	0.3	0.2	0.3	0.5	0.0
	기술직	5.3	4.5	6.0	8.6	9.7	8.3
	사무직	38.2	38.5	36.8	33.1	31.1	30.8
	서비스·판매 관련직	15.4	12.7	13.2	19.0	18.1	19.6
	생산 관련직	29.8	37.5	38.8	29.2	31.6	31.6
	단순노무직	6.4	4.8	3.5	8.3	7.9	9.0
	기타	3.5	1.7	1.4	1.5	1.1	0.8

주 : 관리·전문직 =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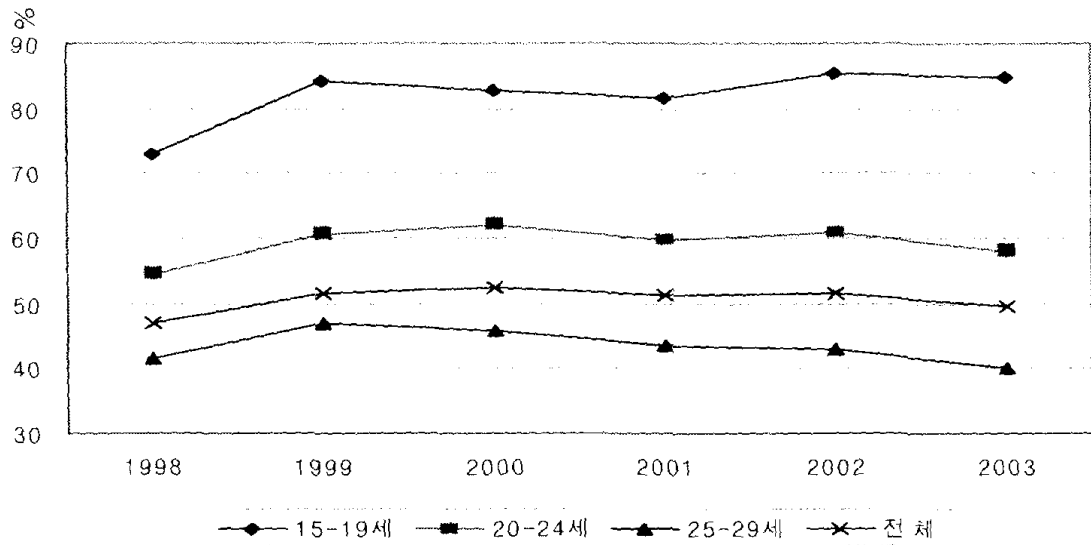
생산관련직 =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기타 = 농업 및 어업 근로자, 군인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lt;교육통계연보&gt; 각년호.

- 이와 함께, 최근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역시 청년층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남

·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10대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80% 이상으로 기록하고 있고, 20대 청년층의 경우에도 중장년층보다 높은 50%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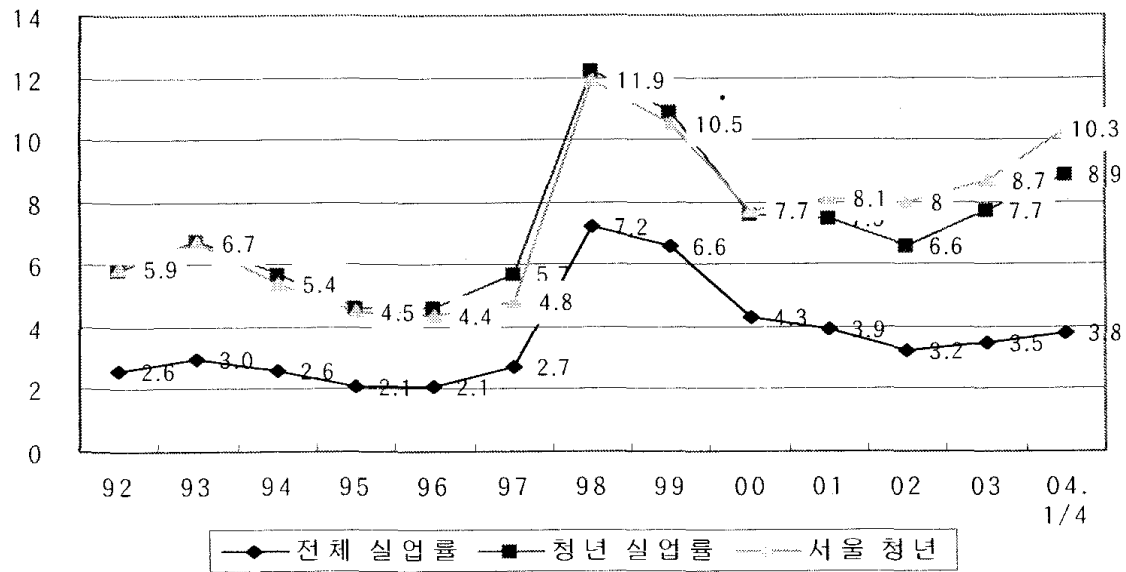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그림 2> 청년층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 변화 추이

#### ○ 서울의 청년실업 현황

- 전국의 청년실업률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전 4.5%를 기록하던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8-10%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998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경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04년 1/4분기 현재 10.3%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보다 1.4% 포인트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 서울의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 o 서울의 대졸실업 주요 양상

- 지역별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을 통해 서울지역 청년층의 실업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서울지역 대졸자 취업률은 59.5%로, 전국의 취업률 66.2%, 수도권 취업률 64.0%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서울 지역 대졸자들의 고용사정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수도권을 향한 대졸자의 구직 집중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데, 실제 출신학교 소재지에 따른 취업동향을 보면, 수도권지역 학교 출신의 수도권 취업 비율은 95.5%이고, 비수도권지역 학교 출신의 수도권 취업비율도 24.5%를 차지하고 있음

<표 4> 16개 시도별 대학 졸업자 취업률: 2004년

(단위: %, 명)

구분 소재지	취업률	학교수		졸업생수	취업자수
		전문대학	대학		
총계	66.2	160(2)	161(17)	493,944	293,105
서울	59.5	12	38(3)	87,721	44,355
부산	70.0	11	11(1)	47,569	29,863
대구	75.1	7	2(2)	23,327	16,368
인천	68.7	5	4	15,516	9,656
광주	62.6	7	7	20,784	12,073
대전	63.9	5	7	21,815	12,193
울산	68.5	2	1	5,775	3,608
경기	67.3	34	24(4)	90,008	55,065
강원	59.5	11	8(1)	19,400	10,249
충북	65.5	6	8(1)	20,133	11,767
충남	72.6	8	11(4)	28,194	18,042
전북	55.9	11	8	22,720	11,394
전남	67.0	10(1)	10	18,553	11,447
경북	68.9	18	16(1)	41,569	26,522
경남	72.2	10(1)	4	24,720	16,496
제주	69.9	3	2	6,140	4,007

주 : 1. 취업률 = 취업자수/노동시장진입인구(졸업자-전학자-임대자-미상)\*100으로 계산.

2. ( )는 분교임. 학교수 전체에는 미포함.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감, 각년도.

<표 5> 출신학교 소재지에 따른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 비율 (단위: 명, %)

근무지 학교소재지	수도권	비수도권	계
수도권	104,158 (95.5)	4,918 (4.5)	109,076 (100.0)
비수도권	45,083 (24.5)	138,946 (75.5)	184,029 (100.0)

주 : 전문대학, 대학만을 포함.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주요 결과”

### 3.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

#### ○ 청년실업의 원인 I : 고용시장의 수요측 요인

- 수요측과 요인으로 몇 가지 요인이 지적될 수 있는데, 우선 경제의 성장속도와 고용흡수력 저하를 손꼽을 수 있음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 7.8%에서 90년대에 6.3%로 하락하였고, 또 KDI의 전망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은 4.8%로~5.2%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고용계수, 즉 GDP 1억원당 취업자 또한 92년 6.2명에서 02년 4.2명으로 크게 하락하여, 거시경제적 고용흡수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음
- 대기업의 청년노동력 수요가 감소
  - 전반적인 고용흡수력 저하 속에서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채용패턴이 경력직 위주로 전환되었음. 실제, 96년 신규채용 대 경력채용의 비율이 96년 65:35에서 00년 21.7:78.3, 다시 02년 18.2:81.8을 기록
  - 더욱이 대졸자의 선호 일자리(decent jobs)인 대기업의 일자리순창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6>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일자리 변동

(단위: 천명, %)

구 분	근로자수		일자리 순창출률	
	청년	전체	청년	전체
1997	627 (42.3)	667	-2.6	0.1
1998	529 (38.8)	661	-17.0	-8.3
1999	507 (36.4)	702	-4.3	1.9
2000	495 (35.4)	710	-2.4	0.5
2001	432 (32.2)	709	-13.6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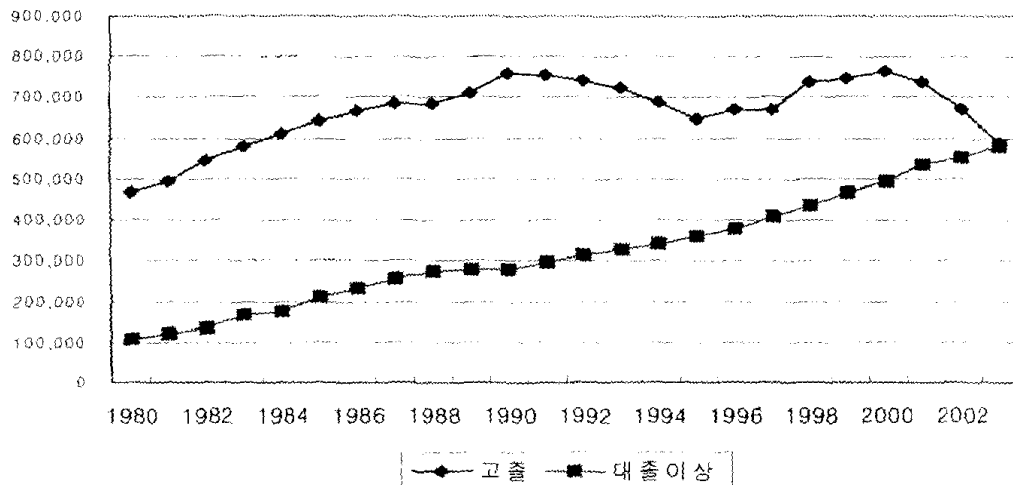
출처: 이병희, (2003),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 청년실업의 원인 II : 고용시장의 공급측 요인

- 대졸인력의 과잉공급

- 1980~2003년간 학력별 증가추세를 보면, 고등학교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 이르면 고졸자를 절대수치에서 상회하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추정됨.
- 학력구조의 고도화는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기대수준을 높여, 상위 직종에서는 과잉공급이, 하위직종에서는 인력부족의 수급불일치가 발생함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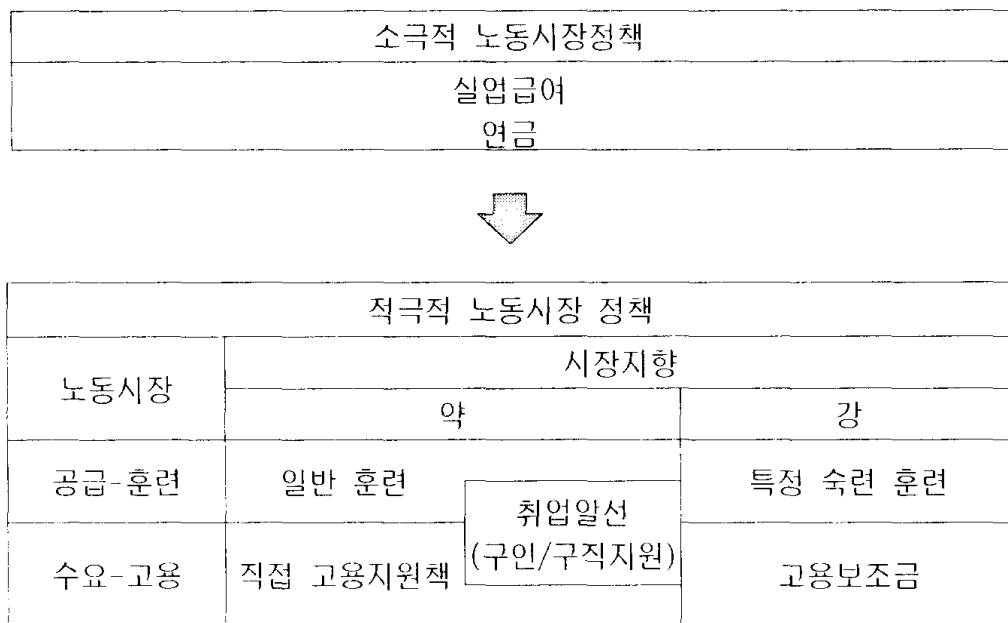
<그림 4> 학력별 졸업자 변화 추이 (단위: 명)

- 중년층 경력자의 일자리 변동이 하향압력으로 작용
  - 경력직으로의 채용패턴의 전환은 계층간 일자리 배분에도 영향을 주어, 중장년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대체
- 학교로부터 직업으로의 이행
  - 노동수요에 대한 하락과 함께, 경력보유자에 대한 선호가 현행 교육시스템과 불일치하고, 기업측에서 제의된 일자리의 업종, 직종, 임금수준이 구직자의 일자리 선호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과 상당한 격차를 보임에 따라 교육영역으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음

#### 4. 고용보조금 제도의 주요 내용

##### o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이행

- 산업구조의 변화, 지식기반산업화, 전문화 등을 둘러싸고, 청년실업이 구조화되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선진국의 노동시장 정책이 소극적 정책에서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됨



<그림 5>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 일반 훈련 :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력소지자를 위해 기본적 수준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함
- 특정 숙련 훈련 : 특정 업종이나 직종과 같은 국지적 노동시장에서 특정한 숙련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정한 훈련을 제공함(CAD나 CAM등)
- 직접 고용지원책 : 가령 환경개선이나 지역사회 아동보호와 같은 공공이나 자원 부문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시 고용으로 구성됨
- 고용보조금 : 민간부문에서 실업자 채용이나 자영업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

#### o 고용보조금 제도의 의의와 효과

- 고용보조금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대책 가운데 하나로, 노동에 대한 수요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미시적인 수요정책임
-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추가적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비용을 인위적으로 감소시켜 줌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
- 본 연구는 이에 더해 고용보조금을 노동의 수요와 공급간 괴리를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에도 주안점을 둬
  - 노동취약계층과 같이 정상 조건에서 이들 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사회복지적 성격의 고용보조금
  - 선호일자리 편중으로 인한 노동수급 불일치 조건 하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고용보조금
- 이러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 일차적으로 사업주의 고용비용 절감을 통해 추가 고용창출효과를 유발
  - 학교로부터 직장으로의 이행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경력획득을 지원
  - 근로자의 실질임금과 소득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효과

#### o 고용보조금 제도의 주요 쟁점

- 고용보조금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초래될 수 있음
  - 사중손실(deadweight loss) : 보조금이 없더라도 본래의 필요에 의해 고용을 창출하려는 기업이 무상으로 보조금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경우
  -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 기업 내에서 보조금을 받은 근로자가 보조금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대체하여 (전자의 경우 후자보다 값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으므로) 고용의 순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전치효과(displacement effect) : 동일업종 내에서 보조금을 받은 회사가 보조금에 힘입은 가격경쟁력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은 기업을 상품시장 경쟁에서 밀어낼 경우, 후자의 고용감소로 인해 보조금에 의한 고용창출이 상쇄될 수 있음

순고용효과 = 총고용효과 - 사중손실 - 대체효과 - 전치효과

\* 전치효과에 대한 실제적 추정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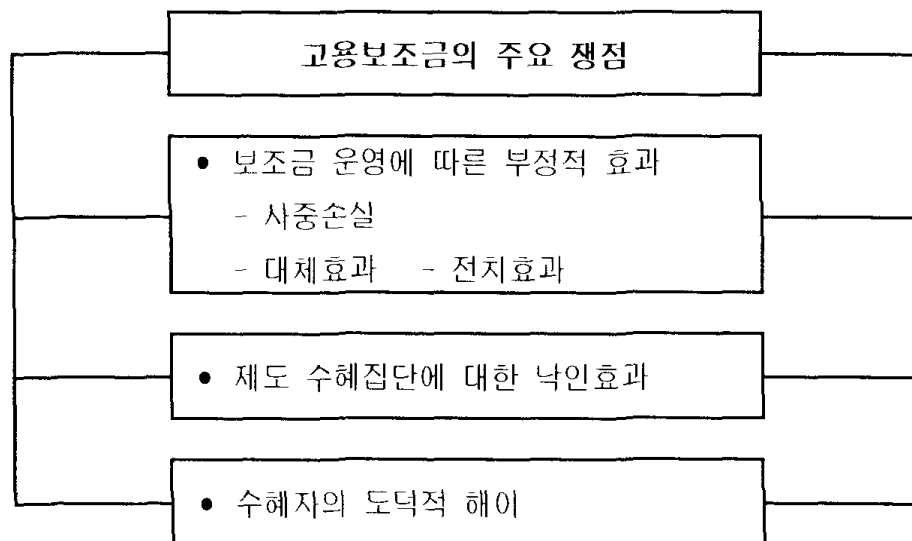
<표 7> 각국의 고용보조금제도 효과

국가	사중손실과 대체효과	순고용 효과
호주, 1980년대 중반 (Jobstart Program)	사중손실 = 65	35
벨기에, 1990년대 초반 (Recruitment Subsidy)	사중손실 = 53, 대체효과 = 36	11
영국, 1986-1990 (Training and Employment Grant)	사중손실 = 69	31
영국, 80년대 후반부 (Workstart I)	사중손실 = 45, 대체효과 = 30	25
영국, 1970년대 중반 (Small Firms Employment Subsidy)	사중손실 = 70	30
영국, 1980년대 초반	사중손실 = 63, 대체효과 = 10	27
독일, 1970년대 중반 (Wage Subsidy Scheme)	사중손실 = 75	25
아일랜드, 1980년대 (Employment Incentive Scheme)	사중손실 = 70, 대체효과 = 21 전치효과 = 4	4
네델란드, 1980년대 초반 (Vermeend-Moor Act)	사중손실 = 25, 대체효과 = 50	25
네델란드, 1980년대 후반 (JOB Scheme)	대체효과 = 80	20
스코틀랜드, 1989-92 (Employment Subsidy)	사중손실 = 20 대체·전치효과 = 55	25
미국, 80년대 중반 (Targeted Jobs Tax Credit)	사중손실 = 70, 대체효과 = 10	20

주 : 순고용효과는 사중손실과 전치효과, 대체효과를 제외한 후의 고용효과임

자료 : OECD, 1998.

- 다른 쟁점으로는, 목표집단 선정 내지 자격요건의 설정과 관련된 것으로, 제도에 참여하는 집단에게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존재함
- 마지막으로 고용보조금 시행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가 존재함.
  - 사후감독이 부실할 경우,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용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감독이 과도하면, 사업주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음
- 선진국들의 경험에 의하면, 고용보조금 프로그램의 순고용창출 효과는 30%를 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순고용 효과가 저조할지라도 프로그램의 의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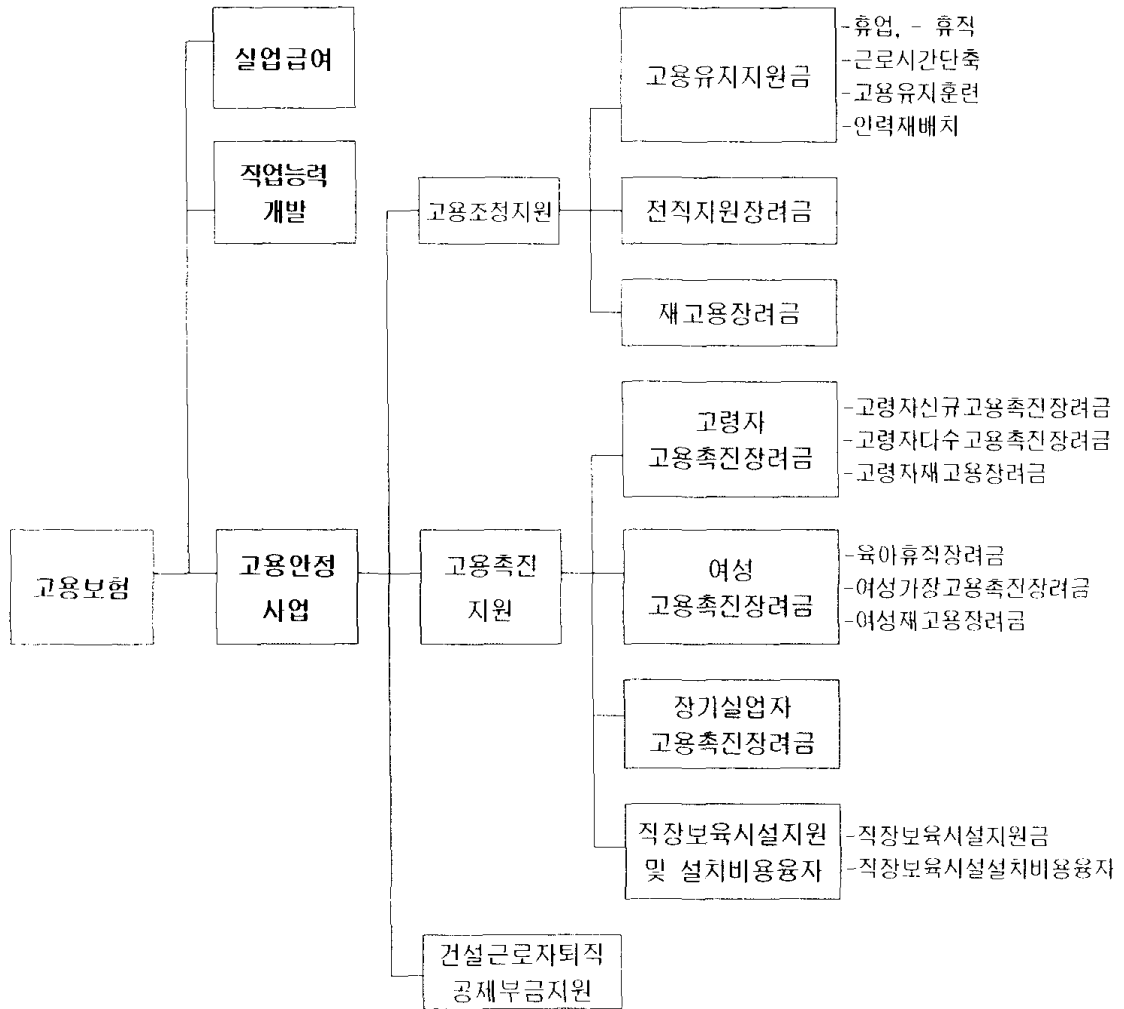
<그림 6> 고용보조금의 주요 쟁점

### Ⅲ. 국내외 고용보조금 제도

#### 1. 국내 고용보조금 제도의 주요 내용

##### ○ 고용안정사업과 고용촉진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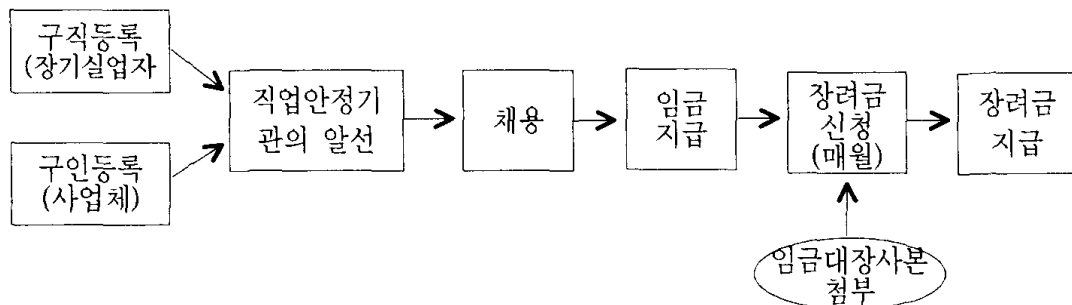
-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로 구성됨.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고용조정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사업, 고용촉진시설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됨(<그림 7>을 참조)
- 이 가운데 고용촉진사업이 고용보조금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 경우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 실업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용보조금 제도와 관련성이 큰 고용보험사업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임
  - 이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업자가 장기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상실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음



<그림 7> 고용안정사업의 구조

<표 8> 국내 고용촉진지원사업 상의 고용보조금제도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다수 고용	매분기 고령자(55세이상)를 당해 사업 근로자수의 6% 이상 고용	다수 고용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 고시 금액에 6% 이상 초과하여 고용한 고령자수를 곱하여 지원(분기당 15만원)
	신규 고용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9만 55세 이상)를 피보험자(만 60세 미만)로 채용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인당 월 25만원 6개월간 지급
	재고용	경영상 이유, 정년퇴직, 질병, 부상, 통근곤란 등으로 퇴직한 45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퇴직 3개월 후 2년 이내에 재고용	재고용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육아 휴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여성 재고용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 재고용한 사업주	여성을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인당 3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유부양가족 여성 실업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 가운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혹은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	1인당 60만원을 6개월간 지급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보험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li> <li>-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신청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60만원을 6개월간 지원</li> <li>- 신규 채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신청</li> </ul>



<그림 8>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운영절차



o 고용촉진지원사업의 주요 특성

- 이하에서는 고용보조금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용촉진지원사업의 주요 현황과 추이를 분석
    - 특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 고용보험 DB가운데 고용촉진사업 활용실태 자료를 입수하여 현황을 분석하되, 이후 본 연구의 수요조사와 고용보조금 제도 설계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전체적으로 최근의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을 반영하여 각 사업의 활용이 제도시행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30- 직종별로 보면, 사무직 종사자가 3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단순노무직으로 27.6%, 기능원 및 관련근로자가 13.0%를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활용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순서임
- 세 청년층이 전체 활용인원의 35.7%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며, 특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청년층 활용빈도는 42.8%에 육박함

<표 9> 고용촉진지원 사업 세부 사업별 추이: 1995-2002 (단위: 건, 천명, 백만원)

구분		1995	2000	2001	2002	2002-2000
고령자	활용인원	24(97.5)	226(50.2)	252(44.3)	272(56.4)	46(6.2)
고용촉진	활용금액	1349(91.2)	36,756(32.3)	41621(32.3)	39980(44.4)	3224(12.1)
여성고용	활용인원	0(0)	3(0.7)	4(0.7)	3(0.7)	0(0)
촉진	활용금액	57(3.8)	2349(2.1)	3821(3.0)	4099(4.6)	1750(2.5)
장기실업자	활용인원	-	0(0)	6(1.1)	14(2.8)	14(2.8)
고용촉진	활용금액	-	359(0.3)	2954(2.3)	7154(7.9)	6795(7.6)
합계	활용인원	249(99.5)	230(51.1)	263(46.1)	289(59.9)	59(8.8)
	활용금액	1406(95.9)	39464(34.7)	48397(37.6)	51234(56.9)	11770(22.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동향> 2003.

<표 10> 고용촉진지원사업 활용인원의 연령별 특성: 2001년 (단위: 명, %)

구분	20세	20~30세	30~40세	40~50세	50~60세	60세 이상	전체
재고용장려금	0(0.0)	85(21.6)	138(35.0)	117(29.7)	54(13.7)	0(0)	394(100)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7(0.4)	740(42.4)	478(27.4)	261(14.9)	259(14.8)	2(0.1)	1747(100)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1(0.2)	49(11.1)	211(48.2)	158(36.1)	19(4.3)	0(0.0)	438(100)
여성재고용장려금	0(0.0)	103(66.9)	49(31.8)	2(1.3)	0(0.0)	0(0.0)	154(100)
전체	8(0.8)	977(35.7)	876(32.1)	538(19.7)	332(12.1)	2(0.1)	2933(100)

자료 : 김복순, 2003, 고용안정사업 수급자의 특성, 금재호외, 고용안정사업 효율성 평가에서 재인용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지원금액 측면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2.1%를 차지하여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고, 이 가운데 30~99인 규모가 25.1%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100~299인 규모업체로 20.8%를 차지함
- 장기실업자고용촉진 사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이 68.7%를 차지, 30인 미만 사업장이 85.6%를 차지함

<표 11> 사업장 규모별 고용촉진지원사업 : 지원액/2002년까지 누적치 (단위: 백만원, %)

구분	고령자신규	고령자다수	고령자재고용	실직여성가장	여성재고용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계
계	49,016 (100)	90,541 (100)	1,054 (100)	2,289 (100)	845 (100)	5,519 (100)	149,264 (100)
5인미만	5,206 (10.6)	1,794 (2.0)	59 (5.6)	1,206 (52.7)	257 (30.4)	2,681 (48.6)	11,203 (7.5)
5~9	6,878 (14.0)	4,484 (5.0)	72 (6.8)	360 (15.7)	143 (16.9)	1,107 (20.1)	13,044 (8.7)
10~29	13,526 (27.6)	14,472 (16.0)	163 (15.5)	297 (13.0)	174 (20.6)	934 (16.9)	29,566 (19.8)
30~99	12,323 (25.1)	23,785 (26.3)	306 (29.0)	291 (12.7)	142 (16.8)	566 (10.3)	37,413 (25.1)
100~299	6,846 (14.0)	23,667 (26.1)	138 (13.1)	105 (4.6)	73 (8.6)	181 (3.3)	31,010 (20.8)
300~499	1,282 (2.6)	7,719 (8.5)	55 (5.2)	17 (0.7)	15 (1.8)	10 (0.2)	9,098 (6.1)
500인 이상	2,849 (5.8)	14,477 (16.0)	262 (24.9)	13 (0.6)	40 (4.7)	39 (0.7)	17,680 (11.8)

자료 : 고용보험동향, 2002.

## 2. 외국의 고용보조금 지원 제도

### o 미국의 고용보조금 지원 제도

- 현행 운영중인 미국의 고용보조금 제도로는 WOTC(Work opportunity Tax Credit), WWTC(Welfare to Work Tax Credit), OJT(On-the-Job Training),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등 다양함
  - WOTC의 경우, 취약계층 등 대상자를 고용하였을 시, 사업주에게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되, 신규 고용 1인당 2,400달러까지 연방세제를 공제해 줌. 97년 도입 이후 활용이 꾸준히 증가여 4.5배의 증가율을 보임
  - WWTC의 경우, WOTC와 제도 형태는 유사하나 혜택면에서 보다 관대하고 대상은 더 한정되어 있음. 유자격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10,000달러 한도내에서 첫째 임금의 35%까지 세금을 감면해주고, 둘째 해에는 50%까지 감면해 줌(2년간 최대 8,500달러까지 세금감면)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현금보조금을 지급받는 제도임. 4주에서 26주간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피고용인 임금의 50%를 보조(최대 5,000달러까지 지원)
  - EITC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세 공제혜택을 제공. 즉, 근로소득세 납세자에게 직접 세금을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임
- 이외에 지역단위의 고용보조금 제도로, 미네소타 고용경제개발 프로그램(MEED), 오레곤 고용증대 프로그램(Oregon Jobs Plus) 등임 운영되고 있음
  - MEED의 경우, 주정부 차원의 가장 규모가 큰 고용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실업수당을 받지 않은 실업자 중 취업 이전 적어도 한달 동안 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초기에 50인 이하 소기업 대상으로 시간당 4.5달러(임금의 약 80% 이상)까지 6개월간 임금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비영리단체의 6~12개월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함
  - 오레곤주 Job Plus의 경우, 실업수당 수혜자가 노동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 시

행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는 13주 시험근무를 함으로써 정규직으로 채용에 필요한 훈련기회와 노동경험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당 5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 초기임금은 사업주가 정할 수 있으며, 13주 시험기간 후 사업주는 참가자 능력을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채용여부 결정

- 미국의 고용보조금 제도가 가지는 시사점으로는,

- 전체적으로, 고용보조금에 대한 정책적 지지가 높지 않으나, 저소득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보조하는 EITC 제도는 기존 복지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저소득층 시장참여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호의적인 평가
- 전체적으로, 고용보조금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운영방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소득재분배, 노동의욕 고취, 현장훈련과의 결합 등이 제도 운영상의 중요 목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o 영국의 고용보조금 지원 제도

- 영국의 경우, 고용보조금은 단일한 정책수단으로서보다는 종합적인 고용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음
- 청년층을 위한 뉴딜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며, 이 프로그램 하에서 고용보조금이 운영되고 있음
  - 뉴딜프로그램은 6개월 이상 구직자수당(JSA)을 신청한 18~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크게 초기단계/옵션단계/사후관리서비스단계로 구성됨
  - 최장 4개월간 개인별 지도상담원을 통해 취업알선을 받으며, 미취업자는 일반취업/환경근로/자원봉사/교육 및 훈련과정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이수
- 특히 뉴딜 프로그램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뉴딜 옵션단계의 '일반취업'에 해당함
- 최장 6개월까지 참여 청년이 노동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기업은 정부로부터 매주 60파운드의 금액을 고용보조금을 지급받게 됨
- 해당 기업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 이상을 청년에게 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업훈련비용은 정부가 참여청년 1인당 750 파운드를 지급함

- 동 제도가 갖는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청년취업자의 임금보조와 직업훈련을 결합시켜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임

#### o 기타 선진국의 고용보조금 지원 제도

- 프랑스의 경우, 민간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 감면방식이 존재함
- 고용촉진계약(CIE)는 민간기업 대상으로 장기실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로 근로계약은 무한기간 혹은 1-2년의 유한기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월 330프랑 정도의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청년고용계약(CEJ)는 고용촉진계약과 달리, 공공부문이 대상이며 신규 창출된 일 자리에 한해서만 채용이 가능함
- 캐나다의 경우, 2주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경험훈련제도(JETP)가 운영되고 있는데, 동 제도에서는 임금보조금을 상담 및 직업소개 등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이외에 고용세액공제제도(ETCP)가 운영되고 있는데, 2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시간당 최대 2달러 세액공제를 3-12개월간 제공하고 있음

#### o 해외 사례분석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

- 높은 수준의 사중손실과 대체효과가 존재하는 바, 적절한 목표집단과 수급기간의 선정,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함
  - 일정 수준의 사중손실과 대체효과 내에서 가능한 최대 순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적정 목표집단과 수급기간 설정, 사업주 감독체계 마련 필요
- 적정 목표집단 설정이 중요한데, 너무 제한적으로 운영하면 참여자의 낙인효과가

우려되고, 사업종료후 고용지속성 문제도 초래될 수 있음. 반대로, 너무 포괄 규정할 경우, 사업주가 보조금을 오남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정책의 방향을 순고용효과의 증대와 함께 참여자의 장기 고용전망의 증대에 맞추어야 함
- 적정 수급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수급기간이 너무 짧으면 막대한 저임금 일자리에의 채용을 촉진하게 됨. 통상 6-9개월이 적정 기간으로 수용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실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과 보조금 액수를 차등 조정
- 프로그램의 참여 증대와 관련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해 기업주가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참여가 저조할 수 있음. 더욱이 복잡한 행정절차로 설계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낮을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직업상당과 직업훈련 등 다른 제도적 지원방안과 연계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그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

## IV. 서울시 고용여건 및 전망: 고용보조금의 정책환경

### 1. 서울시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 o 서울시의 산업구조 현황

- 고용보조금 제도의 기본방향이나 정책틀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고용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와 종사자를 통해 산업구조의 현황과 추이 변화, 그리고 시의 산업정책 등을 간략하게 살펴봄
- 이와 함께 제도설계에서 중요한 정책변수가 할 수 있는 노동력수급 상황과 임금 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임

- 이들 산업통계 기초자료의 분석은 본 연구의 기업 및 청년층 대상 고용실태 조사와 더불어 제도적 방안 고려시, 제도의 목표와 제도운용상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o 서울시의 산업구조 현황 : 95~2002년

- 지난 95년 이후 사업체 3.9% 증가, 종사자 1.8% 감소 속에서 1차산업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9.2%, 종사자수 21.6%가 감소. 반면, 서비스의 경우 사업체 9.8%, 종사자 20.7% 증가함
- 이러한 제조업의 감소와 서비스업의 급증 속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각각의 성장 업종으로는,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이 각각 35%, 68.4%, 제1차 금속산업이 65%, 40.5%,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각각 21.8%, 7.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이 19.0%, 3.2% 증가
  -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197%, 217%, 통신업의 경우 177%, 126%, 전기·가스·수도사업의 경우 28%, 69.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32.3%, 33.8%, 그리고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17.4%, 25.6% 등의 증가를 나타냄
- 앞의 성장업종과 관련하여, 창업률의 경우에도 통신업이 376.8%, 운수업이 214.7%, 이외에 부동산임대업이 114.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109.3%, 사업서비스업이 99.7%로 비교적 활발한 창업을 보임
  - 1차 산업을 중심으로 감소추세가 존재하고, 제조업의 경우에도 창업은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cdot \text{창업률} = X_i \text{년에 창업한 업체수} / X_{i-1} \text{년 총사업체}$$

- 사업체 규모별로 볼 때, 5~19인, 50~99인의 성장세가 높아, 사업체와 종사자수 각각 21~23%, 10~12%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20~49인 사업체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일정한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소규모 영세사업장(1-4인)은 그 증가추세가 미미하고, 1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다만, 00~02년 동안 5~19인 사업체의 증가추세는 감소하는 대신, 300~499인 규모의 사업체, 1000인 이상의 사업체도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이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기업간 흡수·합병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 전체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비교적 고용흡수 잠재력이 높으며, 특히 5~100인 규모의 사업장 고용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o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서울의 산업정책 전환

- 앞의 산업별 성장추세와 함께, 서울시의 고용여건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내용은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임
- 전체 매출액이나 투자액 가운데 지식활동에 투입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을 의미하는 지식기반산업은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구분됨 (산업연구원 구분 기준)
  - 지식기반제조업 : 컴퓨터, 반도체, 첨단전자부품, 통신기기, 생물,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첨단운송장비(항공기 포함)
  - 지식기반서비스업 :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사업서비스,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신문·방송, 문화산업 등임



<표 12>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증가추이: 1996-2002

(단위: %)

구분	사업체				종사자			
	1996	1998	2000	2002	1996	1998	2000	2002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	0.5	0.4	0.5	0.5	2.6	2.3	2.8	2.4
서울시 지식기반서비스업	11.2	11.8	12.4	13.0	24.6	26.6	26.9	30.4
서울시 지식기반산업 소계	11.7	12.1	12.9	13.6	27.2	28.9	29.7	32.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1. 지식기반제조업: 의약품, 컴퓨터·사무용기기,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항공기 제조업.

2. 지식기반서비스업 :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o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서울의 산업정책 전환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각 국가별로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도 앞서 언급한 산업구조 전환, 즉 경제의 서비스화와 지식기반산업의 급증에 대응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중심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산업의 육성에 기초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전략을 추진해 가고 있음
  - 전략산업 : 디지털콘텐츠산업/정보통신산업/금융 및 사업서비스업/바이오산업/의류패션산업
- 특히, 상기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전략에서는
- 이들 산업정책상의 주요 대상 업종과 앞서 언급한 성장 업종 사이에는 상응성을 가지는 바, 이들 성장업종 및 전략산업은 열악한 고용 여건 하에 신규 고용을 흡수할 잠재력이 큰 동시에, 시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짐
  - 다시 말해, 일차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되, 시의 산업정책과의 연계 속

에서 전략산업내 취약한 인적역량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고용보조금 제도가 기여하고자 할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중점적인 정책 대상영역임

- 이는 본 연구에서 고용보조금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을 취한 것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고용보조금 제도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표 >와 같이 중점산업과 비중점산업을 구분하되, 이에 근거하여 기업의 고용실태와 정책수요조사도 실시함
- 중점산업의 제조업의 경우 의류제조업, 영상·음향·통신기기제조업 등을 포함하며, 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을 포함함
- 이외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에 대해 비중점산업으로 구분함

<표 13> 서울의 중점산업

서울의 중점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18	봉제,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64	통신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5	금융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66	보험 및 연금업
24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73	연구 및 개발업
32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제조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34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80	교육서비스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표 14> 서울의 비중점산업

서울의 비중점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15	음식료품		
16	담배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60-63	운송업
20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70	부동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26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91	회원단체
27	제1차 금속산업	92	수리업
28	조립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93	기타 서비스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2. 서울시의 고용구조

- 산업구조와 함께, 취업자 업종 및 직종으로 구체화되는 고용구조 또한 고용흡수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제도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변수임
- 이를 위해 노동부의 「노동력수요조사」 가운데 서울시 원자료를 가공
- 1993~2003년간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업종은 전문직으로 61.8% 성장을 보였고, 이외에 서비스·판매직이 6.6%의 성장을,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가 0.6%의 미미한 성장을 보임
- 이외의 직종에서는 대부분 감소추세를 보였고, 특히 1차 산업 숙련종사자,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원의 감소추세가 뚜렷함
- 다만,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00~03년 22.2%를 증가하여 괄목할 만한 증가추세로 반전됨

<표 15>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 직종별

취업자(천명)	1995	2000	2001	2002	2003	95-03	00-03
계	4823	4668	4727	4783	4753	-1.5	1.8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92	156	180	186	192	0.0	23.1
전문가	348	429	478	505	563	61.8	31.2
기술공 및 준전문가	695	754	704	672	644	-7.3	-14.6
사무 종사자	787	648	665	699	792	0.6	22.2
서비스·판매직	1171	1292	1295	1295	1248	6.6	-3.4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15	10	7	9	6	-60.0	-40.0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776	705	695	694	603	-22.3	-14.5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376	283	289	295	281	-25.3	-0.7
단순 노무직근로자	462	391	414	428	425	-8.0	8.7

주 : 2000년부터 신분류에 근거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이를 직종별 구성을 업종과 교차시킨 뒤 지난 99-03년간 종사자 증가율을 보면, 고용구조의 변화추세를 파악할 수 있음
- 제조업의 경우, 기능원 및 기계조작원은 감소한 반면,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종사자 수는 증가함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사무직 증가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였고, 기능근로자와 생산관련 하위직도 상당한 증가율을 기록함
- 지난 4년간 급성장한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업종의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97%, 숙박 및 음식점업의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90%,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사무직이 56%, 제조업의 전문가 37% 등이 주목됨

&lt;표 16&gt; 서울시 업종별·직종별 취업구조

(단위: 명)

구분(2003)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및 판매직	농업및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 무직근 로자	합계
광업	43	18	84	125	5	1	4	107	25	412
제조업	32,986	29,426	87,635	123,676	13,993	5	51,757	56,388	11,446	407,31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48	1,599	2,442	2,292	97	-	702	190	421	8,391
건설업	18,416	24,029	34,985	44,148	42	282	13,847	4,721	2,516	142,986
도소매및소비자 용품 수리업	35,948	21,727	96,367	134,746	32,111	4	21,042	10,835	8,852	361,632
숙박 및 음식점업	5,780	496	3,934	11,706	56,704	19	2,554	905	3,369	85,46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8,649	9,392	28,855	53,366	5,878	-	8,999	67,199	5,832	188,170
금융 및 보험업	10,733	13,612	59,500	109,350	1,289	2	330	1,658	913	197,387
부동산,임대및 사업서비스업	28,809	113,840	53,452	81,958	8,056	293	21,087	16,622	93,484	417,601
교육 서비스업	4,016	54,382	16,615	16,288	1,622	92	2,057	2,915	3,572	101,55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099	29,318	20,502	11,249	9,801	13	886	1,110	2,141	77,119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598	12,940	15,850	26,073	6,983	21	1,985	3,021	4,561	78,032
합계	154,725	310,779	420,221	614,977	136,581	732	125,250	165,671	137,132	2,066,068

주 :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수요조사 가운데 서울시의 업종 및 직종별 현원을 교차·재가공  
 자료 : 노동부, 노동력수요조사 각년도.

### 3. 서울시의 임금 및 노동력 수급 실태

- 임금은 근로자의 구직행태 및 취업결정에 중요한 변수이자,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고용보조금 제도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업규모나 업종 및 직종별 임금격차가 현저하다면 학력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기대수준의 상승과 맞물려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이 유발되며, 역으로 수급불일치 해소에 요구되는 고용보조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함
- 여기서 업종별/직종별/사업체 규모별 임금지수를 산정해 볼 것임

$$\bullet \text{ 임금지수} = \text{해당 업종(직종)의 임금수준} / \text{전산업 평균 임금수준}$$

- 우선 업종별 임금지수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음식숙박업의 72.2로부터 연구개발업의 168.1에 이르기까지 업종간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한편,
  - 제조업이 낮은 임금지수(95.1)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서비스업 가운데 통신업이 16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전기·가스·수도사업이 154, 금융보험업이 131.5, 항공운송업이 133.3, 사업서비스업이 114~168 수준임
  - 전체적으로 낮은 임금지수를 나타낸 제조업 중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이 25.3%, 사무·계산·회계용기기 제조업이 33.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22.4%의 빠른 임금상승 추세를 나타냄.
- 한편, 임금수준은 직종별로도 고위관리직을 제외한 전문직이 134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이 기술직과 준전문직으로 115임. 이외에, 사무직과 서비스직, 판매직이 각각 93, 72, 8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사무직과 판매직, 기능직, 장치 및 기계조작종사자간 임금격차는 10만원 내외로 그 차이가 거의 없어 하나의 임금군으로 묶일 수 있으며,
  - 사무직(혹은 판매직)을 기준으로 전문직과의 차이는 60만원 정도, 서비스직과의 차이는 30여만원 정도를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 전문가와 서비스직 사이에는 90여만원 정도를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lt;표 17&gt; 서울시 업종별 임금수준의 변화와 임금지수

(단위: 원, %)

월급여액	1993	2000	2002	임금지수	93-02	00-02
전산업	757007.3	1313910.2	1532750	100	102.5	16.7
농업 수렵업 및 임업(01-02)	-	1301286.5	1508525	98.4	-	15.9
어업(05)	-	1419443.2	1333213	87.0	-	-6.1
광업(10-14)	843950.7	1340838.9	1586247	103.5	88.0	18.3
제조업(15-37)	700684.1	1227832	1458006	95.1	108.1	18.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	1003155.4	1771358	2360135	154.0	135.3	33.2
건설업(45)	935011.3	1420414.7	1599521	104.4	71.1	12.6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50-52)	735987.9	1285381.4	1548942	101.1	110.5	20.5
숙박 및 음식점업(55)	631822.4	980644.9	1106879	72.2	75.2	12.9
운수, 창고 및 통신업(60-64)	768106.7	1391990.8	1407757	91.8	83.3	1.1
통신업	875789.3	2095572.7	2482465	162.0	183.5	18.5
금융 및 보험업(65-67)	901125.8	1589429.2	2015996	131.5	123.7	26.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70-74)	706780	1232583.5	1051301	68.6	48.7	-14.7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940305.3	1663123.5	2059429	134.4	119.0	23.8
연구 및 개발업	1040903.5	2174840.1	2577197	168.1	147.6	18.5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639184.2	1151805.8	1768918	115.4	176.7	53.6
교육 서비스업(80)	1151037.5	1566200.1	1753537	114.4	52.3	12.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	753705.7	1455976	1454312	94.9	93.0	-0.1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4976.2	1302619.2	1381555	90.1	52.7	6.1

주 : 임금지수 = 해당산업 임금수준/전산업 평균 임금수준, 2002년 기준.  
 자료 : 노동부, 임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lt;표 18&gt; 직종별 임금수준 비교 (단위: 원, %)

업종	2000	2001	2002	00-02	임금지수
전직종	1313910.2	1393059	1532750	16.7	10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	2312210	2456280	2641750	14.3	172
전문가 (1)	1786016.9	1920172	2052085	14.9	134
기술공 및 준전문가 (2)	1491265.2	1598285	1766506	18.5	115
사무 종사자 (3)	1170980.2	1223283	1429125	22.0	93
서비스 종사자 (4)	1011927.2	1053515	1101971	8.9	72
판매 종사자 (5)	988856.1	1028279	1310968	32.6	8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6)	1079768	1129236	1317577	22.0	8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	1203854.7	1279732	1397597	16.1	9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	1169522.7	1228260	1356223	16.0	88
단순 노무 종사자 (9)	810260.2	818587	918251	13.3	60

자료 : 노동부, 임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마지막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하는데, 2003년 상반기 현재 서울은 전국에 비해 약 1.2배 정도의 임금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사업체 규모와 임금수준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바, 100인 미만 사업장은 서울의 평균 임금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 특히, 5군(300인 이상) 대기업 임금수준과 3군(30~99인) 사업장 임금수준간의 차이는 25만원, 2군(10~29인) 사업장과는 30만원, 4군(100~299인) 사업장과는 불과 10만원 미만의 차이를 보임
  - 따라서, 100인 이상 사업장인 4,5,6군간 임금격차는 미미하여 하나의 임금군으로 묶이는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과 5~99인 사업과 일정한 수준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5군의 대기업을 기준으로 1,2,3군과의 차이를 보면 25만원~57만원 정도므로, 고용보조금을 통한 임금격차를 보정시 고려되어야 함

<표 19> 사업체 규모별 임금 수준

(단위: 원)

월급여총액(원)	2003년 상반기	임금지수
전국	1,633,512	100
1군 (5~9인)	1,347,811	83
2군(10~29인)	1,496,504	92
3군(30~99인)	1,581,419	97
4군(100~299인)	1,694,259	104
5군(300~499인)	1,828,997	112
6군(500인 이상)	2,025,983	124
서울	1,930,776	118
1군 (5~9인)	1,536,707	94
2군(10~29인)	1,809,156	111
3군(30~99인)	1,854,545	114
4군(100~299인)	2,016,935	123
5군(300~499인)	2,105,046	129
6군(500인 이상)	2,264,243	139

자료 : 노동부, 임금통계조사보고서



## ○ 노동력 수급실태

- 서울의 노동력 수급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노동부의 「노동력수요동향조사」
- 전체적으로 서울의 인력수급 상황은 0.79%(2003년)으로 전국의 2.18%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인력부족이 대개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어쨌거나, 서울의 업종별 인력수급을 살펴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부족률이 3.3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도소매업으로 0.95%, 제조업이 0.84%, 숙박음식점업이 0.68%,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0.6%를 차지함
  - 특히, 서비스 업종의 경우 인력부족률(2003년)은 업종에 따라 육상운송업의 10.7%에서부터 금융보험업의 0.01%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매우 큼.
  - 육상운송업 외에, 연구개발업 2.32%,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1.59%, 소매업 1.59%, 통신업 1.07% 등이 비교적 높은 인원부족률을 나타냄
- 한편, 직업별로는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의 부족률이 5.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로 1.29%의 순서임
-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생산관련직의 인원부족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02~2003년 부족률이 크게 증가하였음
  -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의 경우 전체적으로 낮은 부족률 속에 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기업규모별로 보면 2003년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원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5-9인 규모 사업체의 인원부족률이 2.7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100~299인 사업장과 1.99%, 그리고
- 그 다음으로 10~29인 규모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원부족률이 가장 심각함

<표 20> 서울의 산업대분류별 인력 부족률 추이: 1999-2003년 (단위: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광업	0.00	1.33	0.00	0.43	0.00
제조업	0.58	1.48	0.64	1.47	0.8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0	0.00	0.40	0.65	0.11
건설업	0.27	0.14	0.24	0.51	0.4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0.73	0.96	1.23	0.93	0.95
숙박 및 음식점업	0.16	0.53	0.42	0.84	0.68
운수, 창고 및 통신업	0.78	1.01	0.80	3.15	3.39
육상운송업	1.98	2.90	1.68	7.19	10.70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0.68	0.23	0.32	0.70	0.07
통신업	0.13	0.25	0.03	0.44	1.07
금융 및 보험업	0.85	0.49	0.11	0.30	0.05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0.31	0.75	0.42	1.14	0.60
부동산업	0.20	0.13	0.25	0.30	0.63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59	1.55	0.51	2.52	1.59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0.73	1.44	0.92	2.07	0.59
연구개발업	0.13	3.07	0.22	1.32	2.32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0.13	0.33	0.22	0.68	0.40
교육서비스업	0.03	0.26	0.28	0.36	0.1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22	0.39	0.10	0.14	0.03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0.15	0.43	0.57	0.59	0.19
전체 산업	0.48	0.81	0.50	1.14	0.79

출처: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21> 서울시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 추이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9인	2.39	2.18	1.73	4.26	2.78
10~29인	1.43	1.89	1.38	2.61	1.45
30~99인	0.63	0.99	0.65	1.41	0.93
100~299인	0.35	0.89	0.71	1.79	1.99
300~499인	0.97	0.46	0.48	1.43	1.14
500인 이상	0.21	0.64	0.19	0.56	0.19
합 계	0.48	0.81	0.50	1.14	0.79

출처: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 고용보조금 제도를 놓고 이들 인력수급부족 상황과 관련하여 직종에 따른 수급은 교육시스템이나 자격조건에 의해 일차 조정이 되고, 채용은 구인업체 기업내부 조직구성에 의해 이루어질 문제이므로, 직종을 고용보조금 도입시 고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다만,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인력부족 상황은 기피하는 업종과 기업규모로의 청년층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고용보조금 제도의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판단됨
  - 운수업과 제조업을 제외한다면, 사업관련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연구개발업 등 대졸자에 대한 인력수요가 높은 일부 업종에서 부족률이 높음
  - 제조업의 경우 기능직 근로자와 기계조작원 등에 대한 인력부족 현상이 관찰됨
  - 전문가 직종에서 이공계열 공학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존재

## V. 서울시 청년층 실업실태 및 기업체 정책수요 조사

### 1. 설문조사 개요

#### o 조사의 방법

- 청년구직자층 조사 : 국내 온라인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에 등록중인 구직대상자 가운데 만 15~19세의 서울시 거주 청년실업자 3,098명을 대상으로 함
  - 연령별 무작위 추출 후 연령별 할당하여 구조화된 웹설문지에 의해 개인 이메일을 통해 응답
  - 조사기간 : 2004년 8월 11일~8월13일

- 성별/연령별/학력별 분포

- 성별 : 남성이 1,956명, 여성이 1,142명
- 연령별 : 15~19세가 8.1%, 20~24세가 46.2%, 25~29세가 45.6%
- 학력별 분포 : 중졸 이하가 6.6%, 고졸 이하가 24.3%, 전문대졸이 21.5%, 대졸 이상이 47.6%를 각각 차지함

- 기업체 정책수요 조사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특성, 규모별 층화 후 사업체리스트에서 무작위로 1,000개 사업체를 표본추출

- 업체대표나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04년 8월 11일 ~ 8월 26일(16일간)

<표 22> 조사 대상업체의 특성별 분포

(단위: 개, %)

구 분		빈도	비율
전 체		1000	100.0
업종특성	중점산업	700	70.0
	비중점산업	300	30.0
설립연도	1980년 이전	180	18.0
	1980년대	206	20.6
	1990년대	461	46.1
	2000년 이후	153	15.3
규모	1~9인	202	20.2
	10~49인	317	31.7
	50~99인	244	24.4
	100~199인	181	18.1
	200~300인	56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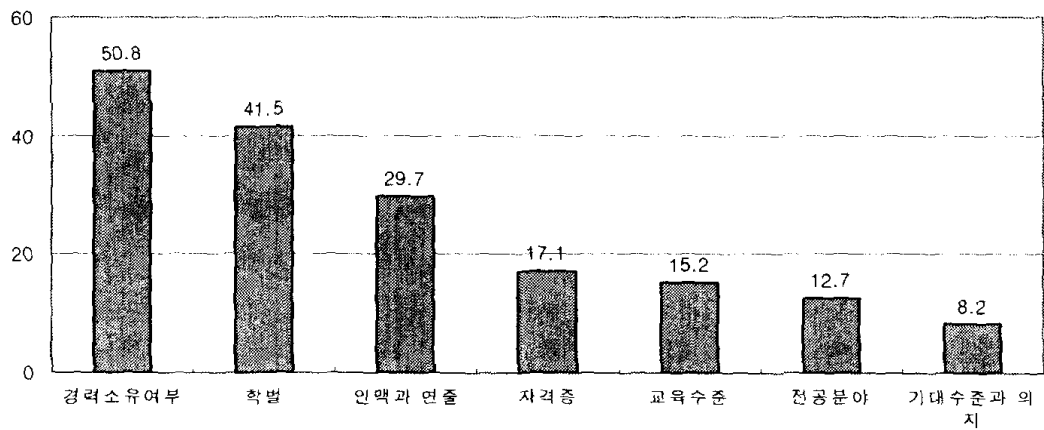
## 2. 청년층 조사 주요 결과 분석

### ○ 청년층 실업 일반 현황

- 설문에 응답한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78.3%이고, 구직을 포기한 층의 비율은 21.7%에 달함
  - 특히, 대졸자 중 졸업후 취업경험이 없는 신규실업자 비중이 전체 대졸 구직자의 32.8%를 차지하여 신규 대졸자 취업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줌
  - 취업경험이 한번 이상인 청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이는 일자리 질적 저하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직업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갖게 함
- 구직활동 기간을 알아본 결과 3개월 이내가 전체의 48.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1년 이상의 장기구직자도 17%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학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존재함

### ○ 청년층 구직실태 및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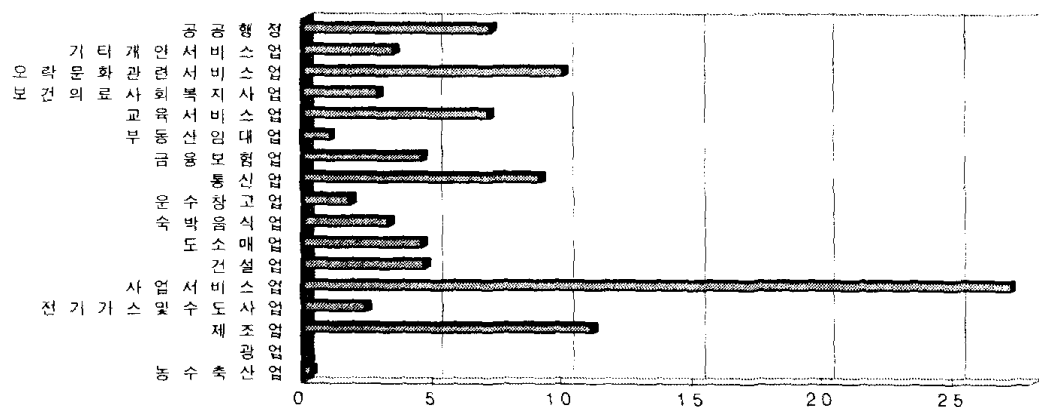
- 대다수의 청년층은 신문·잡지·인터넷 등을 통해 구직정보를 얻고 구직활동을 하며, 공공직업안정기관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취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취업알선기관으로는 학교 취업센터가 가장 높은 평가를 나타내, 고용보조금 제도화 방안과 관련하여 홍보나 지원·접수 등의 절차에서 학교 취업센터와의 연계가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구직자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 취업조건으로는 50.8%가 경력소유 여부를 손꼽았고, 그 다음이 학벌로 41.5%, 인맥이나 연줄이 29.7%를 차지함. 이러한 결과는 현행 경력자위주의 기업채용패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취업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도 전체의 37.3%가 기업의 경력자 선호를 그 이유로 지적하였고, 경력과 연관성이 높은 요인인 자격조건이나 기능부족에 대해서도 35.3%를 지적함



<그림 9> 구직자가 인식하는 취직에 가장 중요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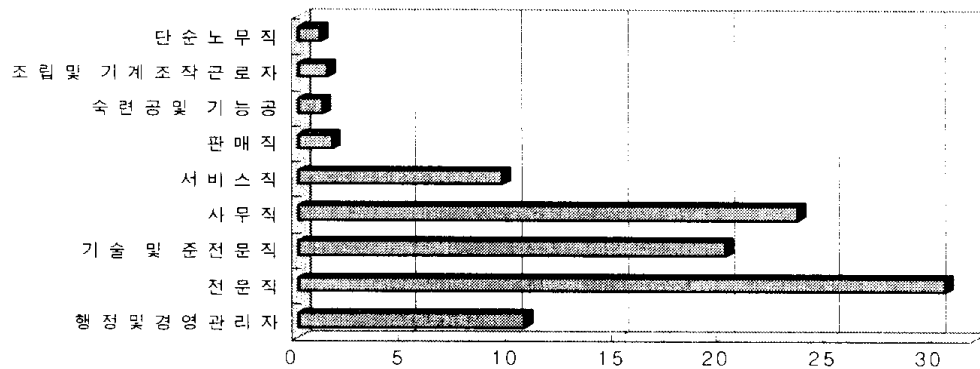
#### o 청년구직자의 직업관

- 청년구직자들은 직업선택에서 직장의 안정성, 임금, 그리고 장래 발전가능성을 각각 44%, 43.2%, 38.8%로 응답하여, 안정성과 임금, 장래성 여부가 청년층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 업종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사업서비스업이 27.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11.0%, 그리고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이 9.9%, 통신업이 9.1% 등으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그림 10> 청년층의 취업 선호업종

- 자신에게 적합한 직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문직과 기술직 및 준전문직에 30.6%, 20.2%를 응답하였고, 이외에 사무직에 23.6%를 응답하여 절반 이상이 전문직 내지 준전문직에 종사하기를 선호함



<그림 11> 청년층 취업 선호 직종

-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응답률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100인 이상을 대기업으로 하는 서비스업의 높은 선호를 고려해 볼 때, 대기업에 대한 강한 선호를 나타냄
- 특히 대졸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체에 응답률이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졸자의 42%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표 23>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규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0인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체		3098	5.2	17.2	32.4	21.4	8.8	14.9
성별	남자	1956	3.2	12.6	32.3	24.6	10.2	17.1
	여자	1142	8.8	25.0	33.6	15.9	6.5	11.2
학력	중졸이하	205	4.9	17.6	34.6	24.9	4.4	13.7
	고졸이하	258	8.5	22.5	25.6	18.6	9.3	15.5
수준	전문대졸	1161	6.9	24.1	32.5	17.8	7.7	11.1
	대졸이상	1474	3.4	10.7	33.2	24.3	10.3	17.1

- 한편, 이들 규모별 선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로 장래 발전가능성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해 각각 32%, 28.2%를 응답
  - 대졸자의 경우 장래발전가능성(34.3%)과 열악한 작업환경(23.5%)과 함께, 적은 보수(23.2%)를 지적함
- 구직자 본인이 취업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신입사원의 월평균 급여수준에 대해
  - 대기업의 경우 평균 180만원에 남자 189만원, 여자 166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134만원에 남자 142만원, 여자 122만원으로,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중임금 차이는 46만원, 그리고 성별 의중임금 차이는 대기업의 경우 23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20만원 정도임
- 한편, 구직자 자신에 대한 적정 급여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평균 179만원을 응답하였음.
  - 이는 앞의 신입사원 월평균 급여수준과 비교해 볼 때, 대기업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임금수준만 놓고 보면 응답자들은 대기업 선호를 은연중에 나타낸 것으로 해석됨
  -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대졸자의 경우 195만원 고졸자의 경우 164만원으로 3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10~29인 사업장과 300~499인 사업장 사이에 45만원의 차이를 나타냄

<표 24> 적정 월평균 급여에 대한 기대수준

(단위: 만원)

(24-A: 구직자 특성별)

구분	전체	성별		학력			취업상대별			
		남자	여자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취업유경험실업자	취업유경험구직포기자	신규실업자	취업무경험구직포기자
월급여	179	192	156	165	164	195	182	175	173	181



(24-B: 구인업체 규모별)

	전체	사 업 체 규 모 (종사자 수)							
		1~9	10~29	3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인 이상
월급여	179	149	153	167	177	185	198	197	223

o 고용보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

- 고용보조금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응답자의 43.7%는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
  - 대졸자의 경우 부정적 의견이 가장 많아 39.2%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함
- 고용보조금 지급시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65%로 나왔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하향 취업의사가 강하게 나타났음
  - 이 가운데 38.1%는 직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하겠다(8.2%)거나 중소기업 직장이라도 취업을 적극 고려하겠다(29.9%)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함
  - 반면, 26.9%는 지급수준에 따라 취업여부를 결정하겠다(18.1%)거나 받는 기간 동안 중소기업 직장에 우선 취업하겠다(8.8%)는 보다 소극적·유보적 태도
  - 따라서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고용보조금 제도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미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는 실직자들을 고려해 볼 때 중소기업으로의 유인효과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다소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구직층에 일정한 긍정적 인센티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적정 고용보조금 액수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 54.9만원선을 지적하였는데, 앞서 임금에 관한 응답결과에 근거해 볼 때 어느 정도 현실적인 응답으로 판단됨
  - 학력별로는 대략 53만원~55만원, 성별로는 남자는 55만8천원, 여자는 53만3천원으로 학력·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음
  - 오히려 희망 보조금 액수의 차이는 혼인여부와 가구상 위치에 따라 커짐

<표 25> 희망하는 고용보조금 금액

(단위: 천원)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미혼	기혼
액수	549	558	549	559	544	538	557	545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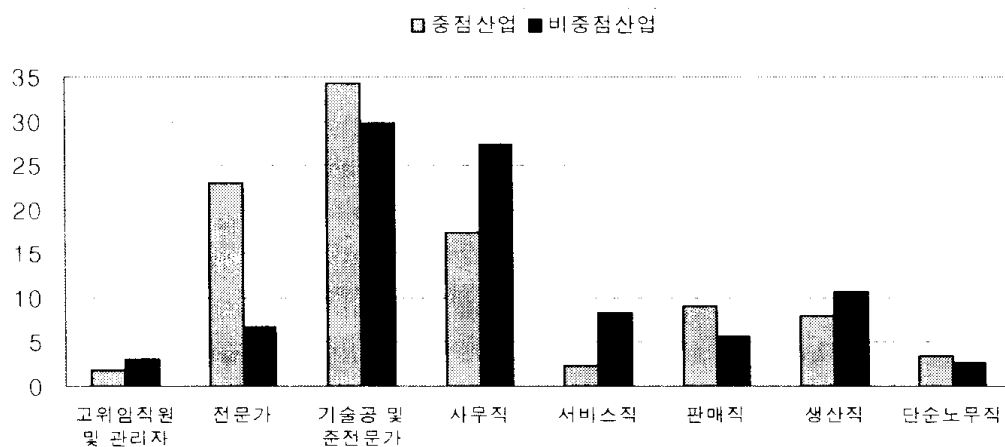
- 고용보조금 적정 지급기간의 경우, 응답자 중 46.0%가 6개월~1년으로 응답하였고, 1년~1년6개월이 15.4%를, 6개월 이내가 21.6%를 각각 응답함. 즉, 구직자의 상당수가 청년실업자 채용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으로 6개월~1개월을 적당한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됨

### 3. 서울시 중소기업 조사 주요 결과 분석

#### o 청년인력 고용 및 수요 현황

- 작년 신규 채용인력이 전체 인력의 16.1%를 차지하여 중소기업에서의 인력이동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신규채용이 전혀 없는 기업이 많음
- 현재 업무량 대비 인력 수급 상황과 관련하여, 응답기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29%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 특히 중점산업이 비중점산업보다 인력부족이 더 심하고, 1~9인 규모의 소기업과 100인 이상의 규모가 큰 업체에서 인력부족이 상대적으로 더 심함
  - 사실상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에서 인력부족에 대해 고용보조금이 제도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인력관리의 어려움으로 인건비 부담 54.4%, 전문인력 구인난 38.2%, 직원의 낮은 업무수행 능력 28.7%, 잦은 이직 28.4% 등이며, 업종특성별로 차이가 존재
  - 중점산업은 전문인력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중점산업의 경우는 잦은 이직과 일반인력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고용보조금 제도 설계시, 중점산업 영역의 중소기업으로 대졸 전문인력 유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을 시사함
- 향후 1~2년 내 신규인력 채용 계획의 경우 약 절반 가량의 기업이 신규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이러한 응답결과는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업, 비즈니스서비스업에서 신규채용 계획이 높음
  - 기업규모가 클수록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는 업체 비중이 높음
- 신규채용시 우선 채용 직종은 기술직 및 준전문직이 3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무직으로 20.0%, 그리고 전문직 18.1%의 순서임
  - 업종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바, 중점산업의 경우 전문직 수요가, 비중점산업의 경우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등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전문가 직종에 대한 수요가 높은 업종으로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업 51.4%, 비전략중점서비스업 39.2%, 비즈니스서비스업이 21.3% 등임
- 이와 같은 직종 수요의 차이는 고용보조금 제도 설계시, 인력수급상의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중점산업과 비중점산업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특히 중점산업의 연구개발직 등 전문가 직종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대졸 전문인력과의 매칭(matching)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제기됨



<그림 12> 신규인력 채용시 우선 채용 직종

- 인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시 기업의 충원방식으로는 절반 이상이 경력직 사원 채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경력직 채용관행의 확산을 여실히 반영함
- 특히 중점산업, 대규모 기업 등에서 경력직 채용의사가 높게 나옴
- 학력별로 보면, 중점산업은 대졸자 채용계획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58.2%), 비중점산업은 고졸자 채용계획도 상당한 정도에 이름(30.1%)

<표 26> 신규인력 채용방식과 학력별 신규인력 채용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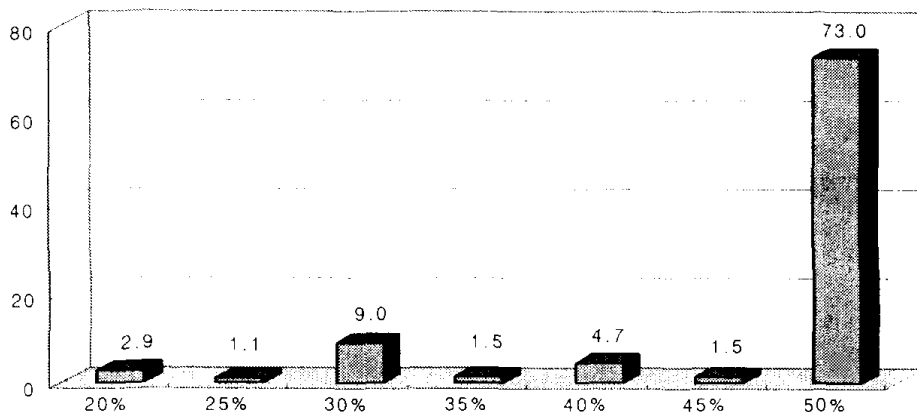
구분	채용방식				학력별 채용 계획		
	경력직 청년층 채용	신규졸업 청년층 채용	경력직 중장년층채용	기타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이하
전체	56.8	24.2	12.9	6.1	55.0	22.3	22.7
중점산업	60.6	23.3	11.1	5.0	58.2	22.1	19.7
비중점산업	48.0	26.3	17.0	8.7	47.1	22.8	30.1

- 서울시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초임 수준을 알아본 결과, 신규학졸자 대졸 초임은 140.9만원, 고졸 초임은 113.3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결과는 앞서 청년구직자층을 대상으로 한 의중임금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가지는 것임. 실제 청년구직자층 가운데 대졸자 기대임금 수준 195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기업측의 제의임금 수준과는 약 54만원의 차이를 나타냄
- 따라서, 기대임금 수준이란 것이 실상 대기업 임금수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이 임금 격차를 일정 정도 보정해 주는데 그 의미가 있음
- 향후 1~2년간 동종 업종의 청년층 인력수요를 조사한 결과, 58.4%의 업체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19.7%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청년층의 취업난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첨단유망업종의 경우 향후 청년층 인력수요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 높은 편임

o 고용보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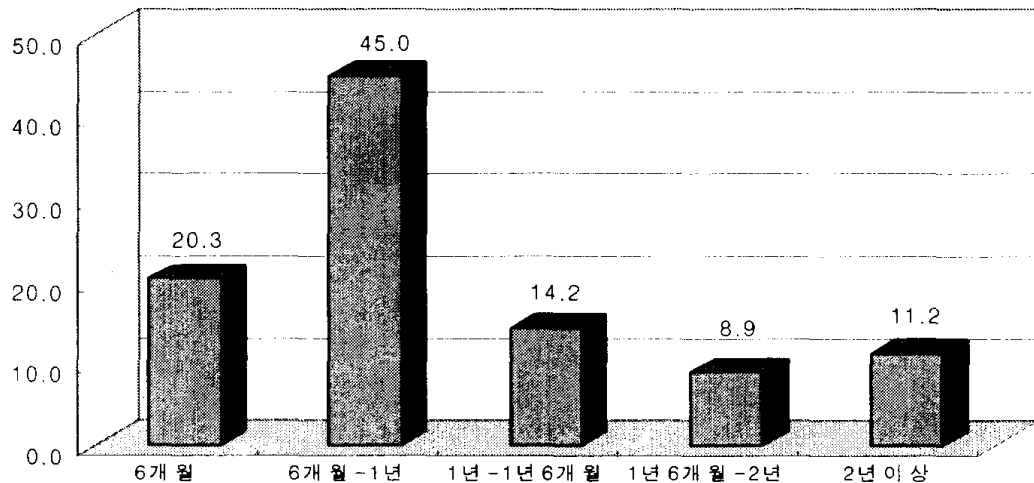
- 기존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각종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체의 18%에 불과하지만, 이들 경험을 가진 업체들 가운데 49.7%는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촉진에 효과적이라고 응답
  -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그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서울시가 고용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면 효과적일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약 절반 정도의 기업이 고용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함
  - 특히, 중점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함
- 신규인력 채용시 고용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적정 지원액을 묻는 질문에 대해 평균적으로 48.9%선이 적정하다고 응답함
  - 업종별·규모별로 큰 차이없이 대략 임금의 50%선을 기대하고 있음



주: 임금대비 비율

<그림 13> 신규인력 채용계획 수립을 위한 고용보조금 기대수준

- 고용보조금의 적정 지급기간으로는 6개월~1년 사이가 4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6개월로 20.3%를 차지함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과 유사한 지급기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4> 고용보조금 적정 지급기간

- 보조금 지급방식으로는 조사대상업체의 68.3%가 보조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지급 총액을 신규채용 즉시 지급이 14.7%, 세금감면 방식이 8.4%로 나타남

#### 4. 조사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 1) 서울시 청년층 조사분석 요약

###### ○ 청년층 실업 일반 현황

- 설문에 응답한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78.3%이고, 구직을 포기한 층의 비율은 21.7%에 달함
- 특히 대졸자 중 졸업후 취업 경험이 없는 신규실업자의 비중이 전체 대졸 구직자 중 32.8%에 이르러 대졸 신규인력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줌
- 구직활동 기간을 알아본 결과 6개월 이내가 전체의 48.0%로 나타남
- 1년이상의 장기실업자를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실업이 장기화 되는 경향을 보여 저학력 취약계층의 배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년층 구직실태 및 경험

- 대다수의 청년층은 신문·잡지·인터넷 등을 통해 구직정보를 얻고 구직활동을 하며, 공공직업안정기관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취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취업알선기관으로는 학교 취업센터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이후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시 학교 취업센터와의 연계가 중요한 제도운용상 고려 사항임을 알 수 있음
- 기업의 경력자 위주 채용관행이 일반화되면서 구직자들도 취직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경력소유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음. 그 다음 중요한 조건은 학벌, 인맥과 연줄 등 '연고'와 관련된 조건이었음. 반면 자격증, 전공분야 등 소위 '실력'에 해당하는 항목은 낮은 평가를 받음

○ 청년구직자의 직업관

- 청년구직자들은 직업선택에 있어 직장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임금수준과 장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함
- 선호 업종을 보면, 사업서비스업이 27.1%, 제조업이 11.0%,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이 9.9%, 통신업이 9.1% 등으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 자신에게 적합한 직종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직, 기술 및 준전문직이 가장 높음
- 취업 희망 기업규모의 경우, 100인 이상 기업이 전체의 45%를 차지하여 대기업 내지 대기업에 준하는 규모의 기업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는 여성, 전문대졸자 및 고졸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중소기업 기피 이유로는 장래 발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작업환경의 열악함이었음
- 대졸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장래성·임금수준 등을, 전문대졸자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의 열악함이 상대적으로 기피의 이유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적정 월평균 급여는 전체 평균이 179만원이었고, 남성·대졸자·취업경험자 일수록 기대임금 수준이 높아짐

#### ○ 고용보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

- 고용보조금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응답자의 43.7%가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
- 대졸의 경우 부정적 의견이 가장 많아 39.2%를 나타냄
- 고용보조금 지급시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65%로 나왔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하향 취업의사가 강하게 나타났음
- 적정 고용보조금 액수에 대해 응답자 평균은 54.9만원선. 학력·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음
- 오히려 희망 보조금 액수의 차이는 혼인여부와 가구상 위치에 따라 커짐
- 고용보조금 적정 지급기간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6개월~1년으로 응답하였음

## 2) 서울시 중소기업 조사분석 요약

#### ○ 인력 고용 및 수요 현황

- 작년 신규 채용인력이 전체 인력의 16.1%를 차지하여 중소기업에서의 인력이동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신규채용이 전혀 없는 기업이 많음
- 인력관리상 어려움으로 인건비 부담 54.4%, 전문인력 구인난 38.2%, 직원의 낮은 업무수행 능력 28.7%, 잦은 이직 28.4% 등으로 나타났는데, 업종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중점산업은 전문인력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중점산업의 경우는 잦은 이직과 일반인력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고용보조금 제도 설계시 중점산업 중소기업으로의 대졸 전문인력 유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지점
- 향후 1~2년 내 신규인력 채용 계획의 경우 약 절반 가량의 기업만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업, 비즈니스서비스업에서 신규채용 계획이 높음
  - 기업규모가 클수록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는 업체 비중이 높음
- 신규채용시 우선 채용 직종은 기술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 전문직 순이었음
  - 중점산업은 전문직 수요가, 비중점산업은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나타냄
  - 중점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전문직 수요가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대졸 전문인력 유도 정책이 요구됨
- 필요인력 발생시 충원방식은 절반 이상의 기업이 경력직 사원 채용을 선호함
  - 특히 중점산업, 대규모 기업 등에서 경력직 채용의사가 높게 나옴
  - 학력별로 보면, 중점산업은 대졸자 채용계획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58.2%), 비중점산업은 고졸자 채용계획도 상당한 정도에 이름(30.1%)
- 서울시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초임 수준을 알아본 결과, 신규학졸자 대졸 초임은 140.9만원, 고졸 초임은 113.3만원으로 나타남
  - 청년구직자층의 기대임금 수준과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청년구직자층의 기대임금은 대졸자의 경우 195만원에 이르러 기업측의 제시임금과 약 54만원의 차이를 나타냄
  - 기대임금 수준은 대기업 임금수준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이 임금 격차를 일정 정도 보정해 줄 필요가 있음
- 향후 1~2년간 동종 업종의 청년층 인력수요를 조사한 결과, 58.4%의 업체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19.7%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청년층의 취업난

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첨단유망업종의 경우 향후 청년층 인력수요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고용보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

- 기존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각종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체의 18%에 불과함
- 이들 업체 중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촉진에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7%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그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서울시 도입예정인 고용보조금 제도의 예상 효과를 묻는 질문에 약 절반 정도의 기업이 고용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함
- 중점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함
- 고용보조금 적정 지급액 기대수준은 임금의 약 50%선으로 나타남
- 적정 지급기간은 6개월~1년 사이가 45.0%로 가장 높아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과 유사하게 조사됨
- 보조금 지급방식으로는 대다수가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음

### 3) 고용보조금제도에 대한 시사점

-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는 중소기업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고 청년층에서도 이 점을 취업시 가장 큰 애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학졸 구직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특별히 요구됨
- 특히 대졸 미취업자 중 신규실업자 비중이 32.8%에 이르고 있어 대졸인력의 유희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 이들 계층의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

로 고용보조금 제도가 설계되어야 함

- 또한 대졸 구직자의 경우 중소기업 기피 사유 중 장래 발전가능성 및 임금수준이 주된 이유임을 감안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과 적절한 취업유도 정책이 필요하고, 여기서 고용보조금 제도의 주요 정책목표로 대졸 우수인력의 유망 중소기업 취업 유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점산업의 경우 전문인력에 대한 중단기적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 수요 측면에서도 이러한 정책목표는 적실성을 지님
-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신규 대졸자 채용시 발생하는 추가 교육훈련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사내훈련 지원 체계가 고용보조금 제도 내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구직자의 기대임금과 기업의 제의임금 격차는 대졸자의 경우 약 50만원선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수준을 감안하면, 고용보조금 적정 지급액수의 기준은 일정한 수준에서 판단 가능함
- 적정 지급기간은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공히 6개월~1년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VI. 서울시 고용보조금 도입방안

### 1.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시 주안점

#### 1) 선행 제도와 차별성

- 현재 정부는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고용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여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보조금, 여성고용촉진보조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보조금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
  - 이들 고용보조금제는 노동시장에서 구직에 구조적 장애를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적 재분배 성격이 강하고
  - 사업주에 의해 충당된 고용보험 기금을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으로 하고, 따라서 사업주 보조금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서울시의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방안에 이들 선행 제도들과의 관계가 확립되어야 함
  - 목표집단의 선정, 구체적인 운용방안 등 기존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틀과 유사한 틀에 입각한 것인지, 차별화된 제도 운영방식을 취할 것인지 등의 명확한 관계정립이 필요함
  - 제도의 유사성, 중복성을 감안해 볼 때 차별화된 제도운용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특히 선행 제도와 차별적인 목표, 차별적인 대상집단 등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2) 제도의 목표

- 고용보조금 제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적절한 목표가 확립되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고용보조금 제도는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그

하위 목표로 다양한 목표가 모색될 수 있음

- 제도의 목표로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이 설정됨
  - 고용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 청년층 가운데서 장기실업자, 저숙련·저학력 구직자에 대한 지원
  -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의 해소 : 수요측과 공급측 양자간의 불일치로부터 발생하는 겹을 보조금을 통해 완화
- 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의 산업정책 전반적인 방향이나 목표와 연계될 수 있음
  - 성장 잠재력이 높고 시의 전략적 육성 대상 산업이지만 대졸 인력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으로의 인적자원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함
  - 다시 말해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적절한 산업영역(업종·직종)으로 우수 인적자원을 유도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로의 시의 산업경제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음
- 정부의 선행제도와의 차별성을 고려해 볼 때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의 연계가 바람직하되, 고용보조금을 기업에 대해 신규 비경력자 고용을 위한 고용장려금으로, 청년층에 대해서는 임금보조 인센티브로서 의의를 가짐
- 이러한 목표 설정은 제도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결부되어 있음
  - 목표에 따라 고용보조금 지급방식의 차이가 존재 : 사업주 보조금/근로자 보조금
  -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고용보조금 재원의 적절한 배분이 결정될 수 있음

### 3) 제도 운용의 방식

- 목표 설정에 대한 고려를 하고 난 이후, 제도 운용에 필요한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에서 사전에 다각적인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 이를 위해 서울시의 고용여건과 고용 수급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더해 수요측 기업과 공급측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세 수요조사를 실시함
  -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제도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

#### ① 목표집단(대상집단)

- 앞서 언급한 목표에 상응하여 적정 대상자 집단 혹은 자격요건을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목표집단을 엄격하게 한정할 것인가,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고려
  - 고용보조금 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목표집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낙인효과가 초래되는 반면, 반대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부적격 기업이나 계층에게로 수혜가 돌아가는 등 사중손실의 문제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 적격 업종 및 직종에 대한 고려와 적격 수혜집단에 대한 고려가 목표집단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음

#### ② 보조금 지원방식

- 고용의 어떤 측면에 대해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
  - 대상자 고용 전체에 대해 지원할 것인가, 고용의 순증가분에 대해 지원할 것인가, 혹은 충유입분에 대해 지원할 것인가 등

- 어떠한 지급방식에 의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 지급방식은 크게 사업주 보조금과 근로자 보조금으로 양분될 수 있으며,
  - 사업주 보조금이 특정 집단의 고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제도 운용의 주요 목적이라면, 근로자보조금은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어 임금 보전을 통한 소득분배효과를 기하는 것이 중시됨
  - 사업주 보조금의 경우에는, 다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것인가, 세제를 통한 지원 (tax credit)인가를 결정

### ③ 지급규모와 기간

- 재원의 한도 안에 적정 지급규모(금액)와 기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 지급규모와 기간의 적정성은 고용보조금 제도에 대한 기업과 구직자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임(※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민감도 조사)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조금 지급규모는 학력수준별로, 업종이나 직종 등 사업체 특성별 차이가 존재함
  -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총액베이스로 일시불 지급을 취할 것인가, 매달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지급할 것인가도 결정

### ④ 제도적 인프라의 활용

- 중앙정부 차원의 고용보조금 제도는 고용안정센터 등의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제도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임
-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전체 청년실업자 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조금 제도 시행은 제도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현재로는 실효성이 없음. 따라서 서울시 고용보조금 제도는 기존의 고용안정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대졸 우수인력의 유망 중소기업 취업 유도를 위한 고용보조금 제도는 우선적으로

각 대학(전문대 이상)의 취업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청년층 구직자의 경우 취업알선 기관 중 교내 직업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응답자 전체의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 교내 직업센터가 가장 도움이 된 기관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중소기업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의 경우 서울시 산하의 시립직업전문학교의 기존 구인-구직 연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

#### 4) 타 관련 제도와의 연계

- 고용보조금 제도에 대한 평가 연구와 사례 분석에서 밝혀지듯이, 고용보조금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임
- 고용보조금 제도와 함께, 고용훈련제도와 같은 다른 관련 제도를 연계 운용함으로써 동 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 일부 고용보조금은 채용 예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보상으로서 제공되는 경우도 존재함
- 기업에 대한 다른 재정지원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함
- 기업의 창업활동에서 고용보조금 제도의 연계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음

#### 5)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마지막으로 고용보조금 제도화에 시행후 사후 평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음
- 앞서 강조된 바와 같이, 고용보조금 제도는 대부분 사중손실과 대체효과를 경험하고 있고, 따라서 순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음
- 이들 부정적 효과가 고용보조금 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나 조건들이 사전적·사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사전적으로 제도 설계에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정 대상자 집단, 계약절차를 마련하되,
  - 특히, 기존 노동력의 감소없는 추가적 고용이 계약조건으로 확립되어야 함. 즉, 고용보조금으로 신규 채용한 인력을 대신하여 정리해고가 없어야 함
- 사후적으로, 원래 제도 도입 당시 설정된 목표에 비추어 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적 효과와 운용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제도의 수정·보완으로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함

## 2. 고용보조금 도입을 둘러싼 주요 여건

### 1) 제도적 여건

-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조금(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제도는 현재 중앙정부의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장기구직자고용장려금과 2004년 10월 도입될 예정인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이 대표적임
  - 이들 고용보조금 제도는 공히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됨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1999년 ~ 현재)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신청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체에 근로자 1인당 60만원을 12개월간 지원
  - 제도 운영절차 : 구직자와 구인업체는 고용안정센터 등의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후

알선을 받아 채용이 이루어짐. 사업주는 임금대장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직업안정 기관에 장려금 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 장려금이 지급됨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 중 청년층(30세미만)의 비율이 42.8%에 육박함. 이는 청년층에서 고용보조금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사실을 반증함

○ 청년고용촉진장려금 (2004년 10월 신설 예정)

-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2004년 7월)
-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 후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30세 미만 청년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기업에게 채용 후 6월은 60만원, 나머지 6월은 30만원(중소제조업은 60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할 예정임

○ 중앙정부의 고용보조금 제도의 특징

- 재원은 사업주 기여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함
- 행정적으로는 고용안정센터 등의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구직자 또는 청년실업자에 대한 기업측의 노동 수요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 지원방식을 취함 →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함
- 고용상의 취약한 여건에 처한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함. 따라서 동 제도 운영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반영한다거나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다시 말해, 취약계층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력 정책은 아님

○ 서울시의 고용보조금 도입 및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현행의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되, 이들 제도와의 차별성을 모색함

## 2) 노동시장 여건

- 노동 수급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노동시장 구조
  - 노동에 대한 수요자(기업측)와 공급자(청년층 구직자)로 구성되는 노동시장은 양자가 가지고 있는 고용여건이나 구인·구직의 패턴, 직업 및 채용의 선호 등에 따라 일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은 노동수급상의 조건이 현재 청년층을 둘러싼 높은 실업을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조금 제도 설계시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다음의 내용들은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해 나타난 노동시장의 여건으로 노동공급측(청년구직측)과 노동수요측(구인기업측) 각각을 언급함
  - 노동공급측(청년구직자측)
    - 선호 업종 : 27.1%가 사업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이 9.9%, 통신업 9.1%, 교육서비스업 7.1%, 제조업 11%
    - 선호 직종 : 전문직 30.6%, 사무직 23.6%, 기술 및 준전문직 20.2%
    - 선호 기업규모 : 응답자의 23.7%가 300인 이상 기업을 선호, 45.1%는 100인 이상 기업을 선호. 특히 대졸자의 경우 52.7%가, 그리고 고졸자의 경우 43.3%가 100인 이상 기업을 선호. 제조업 300인 이상, 서비스업 100인 혹은 200인 이상이라는 대기업 기준을 고려해 볼 때 대략 절반에 해당함
    - 중소기업 기피 사유 : 장래발전가능성의 제약(32%)과 열악한 작업환경(28.2%), 적은 보수(20.4%)
    - 구직활동기간 : 6개월 이상의 장기구직자는 3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개월 이하는 48.3%를 차지하고 있음
    - 취직시 가장 중요한 조건 : 경력소유여부(50.8%) 학벌(41.5%) \*복수응답
    -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 자격조건이나 기능부족이 35.3%, 기업의 경력자

선호37.3%, 기대에 못미치는 고용조건(보수)이 27.3%를 응답하여 취직시 중요 조건과 마찬가지로 경력이나 자격조건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복수 응답

- 노동수요측(구인기업측)

- 업무량 대비 인력수급 상황 : 절반 정도는 적당한 수준, 25.7%가 인력부족 상황. 업종 전반의 채용여건에 대해 절반이 수급 균형, 29%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응답
- 인력 채용방식 : 경력있는 청년층 정규직 수시채용이 56.8%, 신규청년층 정규직 정시채용이 24.2%, 경력직 중장년층 정규직 수시채용이 12.9%를 응답하여 경력직이 전체의 70%를, 그 가운데 57%가 청년층임
- 인력관리상의 애로 : 50.7%는 인건비, 38.2%가 전문인력 구인난, 28.7%는 낮은 업무수행능력을 응답하고 있어 인력채용에 따른 부담과 전문인력 구인난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채용계획 : 50.8%가 신규 채용계획이 있음(평균 채용예정 인력 11.4명), 신규 채용 가운데 61.5%가 경력직을 선호
- 절반 이상의 기업이 신규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음은 사중손실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함
- 채용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 실무경험과 관련 업무의 적합성
- 신규인력 채용시 애로사항 : 자질이나 숙련부족이 48.4%, 중소기업 기피가 28.4%, 인력공급 부족이 15.1%를 응답하여 노동수급 불일치 중 수요측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요소들이 중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선 채용 직종 :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32.9%, 사무직이 20.4%, 전문직이 18.1%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세 직종을 중심으로 한 인력수요가 상대적으로 큼

- 신규실업자는 32.8%
- 저학력층 실업의 장기화(고용취약층)
-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이 28.1%
- 취직의 중요 조건으로 50.8%가 경력소유여부
  - 실패이유도 37.3%가 기업의 경력자 선호
- 취업희망기업으로는,
  - 100인이상이 전체의 45%로 중대기업 선호
  - 선호업종으로는 사업서비스가 27.1%, 오락 및 문화업이 9.9%, 통신업이 9.9%의 순
  - 선호직종으로는 전문직, 기술및준전문직 순
- 중소기업 기피사유로 장래발전가능성과 임금 수준의 응답(대졸자의 경우)
- 구직행태는 현재의 선호기업 구직을 고수하겠다는 47.6%(1순위 기준)
- 적정 임금수준은 월 179만원
  - 대졸자의 기대임금은 195만원

- 신규채용인력이 전체 인력의 16.1%를 차지
- 향후 신규채용계획은 50%가 가지고 있음
  - 소규모 기업일수록 신규채용이 감소
  - 중점업종, 첨단유망업종이 인력수요 높음
- 인력관리상의 애로로 인건비 부담이 54.4%, 전문인력구직난이 38.2%,
  - 중점업종의 경우, 전문인력구인난
  - 비중점업종의 경우, 작은이직과 일반인력난
- 우선 채용직종은 기술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순서
  - 중점업종의 경우, 전문직(연구개발직)
  - 비중점업종의 경우,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순서
- 인력충원방식으로는 절반이상이 경력직
  - 중점산업, 대규모 기업일수록 강함
- 중소기업 신규초임으로는
  - 신규대졸초임이 140.9만, 고졸은 113.3만원

#### 노동공급측(청년층 구직자)

#### 노동수요측(기업측)

- 노동수급상의 불일치
  - 경력직 선호와 대기업 선호
- 기업특성별, 계층별 차별성이 존재
- 기업의 여건과 요구에 부합하도록 청년층을 matching

#### 노동공급측(청년층 구직자)

#### 노동수요측(기업측)

- 실업해소에 도움이 된다가 43.7%
  - 대졸자 경우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큼
- 고용보조금 지급시,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65%
  - 교육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음
- 지급기간 6개월~1년이 46%
- 지급액은 61.2%가 40~60만원을 응답
  - 매월 50만원 지급이 전체의 33.4%

- 동 제도의 이용경험을 가진 기업이 13.3%
  - 이 가운데 37.5%가 효과적으로 응답, 35%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
- 채용촉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절반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 31%는 부정적
- 지급기간으로는 6개월~1년이 51.3%
- 지급액으로는 신규채용 임금의 50%에 대해 62.7%가 응답
- 적정 지급방식으로 매월 현금 지급을 선호

### 3.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 방안

#### 1) 고용보조금 제도의 기본 방향과 목표

##### ① 기본방향

- 인력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이나 직종에 경력이 없는 신규 청년실업자 계층을 matching시킴
  - 이를 위해 기업이나 청년계층(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방식이 강구하되,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서울시의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함
  - 서울시의 산업구조나 전략산업 육성 등의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선행 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점산업과 비중점산업을 구분하고, 이를 제도화 방안에 반영함
  - 중점산업과 비중점산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를 참조
- 중앙정부 차원의 고용보조금 제도와 차별화를 지향함
  - 일반회계를 통해 운영하게 될 동 고용보조금 제도는 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는 영역을 선별 차등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재원을 기반으로 하여 계층이나 업종에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것과 구분됨
  - ※ 정부 차원의 고용보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의 구직기간이 지난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함. 특히 금년 10월 실시 예정인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모든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서울시의 산업발전 전략과의 연계를 모색한 점도 중앙의 보조금 제도와 차별화

## ② 목표

- 경력이 없는 신규 청년실업자에 대한 채용촉진을 통해 실업률 완화
- 고용보조금의 기본 목표는 기본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해 실업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단기 목표로 서울의 청년실업률을 국가 전체 평균 실업률까지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5%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음
-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고용보조금을 통해 청년층 우수 인적자원을 중소기업으로 유도
  - 대졸 구직자에게 적정한 임금보조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의 행정관리, 전문기술직 대졸 인력의 유치
  - 고용보조금과 함께 직장내·외 훈련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신규 취업자의 경력 및 숙련 향상을 지원
- 고용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소득안정
  - 청년층 가운데 장기실업자, 저숙련·저학력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

## 2) 고용보조금 제도의 운용방안

- 운영방안으로 사전에 제도의 거시적 프레임에 해당하는 표준화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각각을 검토함
  - 표준화는 지원방법과 재원조달, 자격조건과 관련하여 각 시나리오가 공통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에 해당
  - 표준화로부터 도출되는 대안으로서 시나리오는 계층이나 업종에 따른 차등 지원을 위한 세부적 방안에 해당함

## ① 표준화

### ○ 지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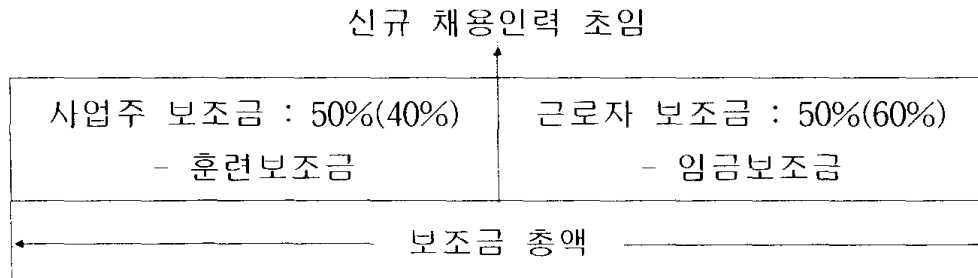
- 사업주 및 근로자 보조금 절충, 정액제 + 현금지급
  - 기본원칙은 근로자 보조금이 사중손실의 최소화나 우수인력의 유인에 합리적이지만, 고용시장의 성격상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의지가 우선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업주 보조금 방식과의 절충을 취함
  - 즉, 지원 단위당 보조금의 일부는 사업주의 고용장려금으로, 다른 일부는 임금보조금으로 설정함
- 최소 자격조건 :
  - 경력이 없는 청년층 실업자(15세~29세) : 고용보조금의 정책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로 인해 구직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재원조달 : 일반회계
- 지급기간 : 12개월
  - 조사결과에 구인 및 구직자 모두 6~12개월을 선호

## ② 목표집단에 따르는 두 가지 지원방안

- 시나리오 I : 한정된 지원 영역에서 임금보조금 + 훈련보조금 절충안
  - 지원대상자 : 서울 거주 대졸 이상의 경력이 없는 30세미만의 구직자
  - 지원업종 : 중점 산업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 중점산업: 별첨 2자료 참조
  - 운용방식
    - 근로자 지원과 사업주 지원의 혼합형 지원방식 :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수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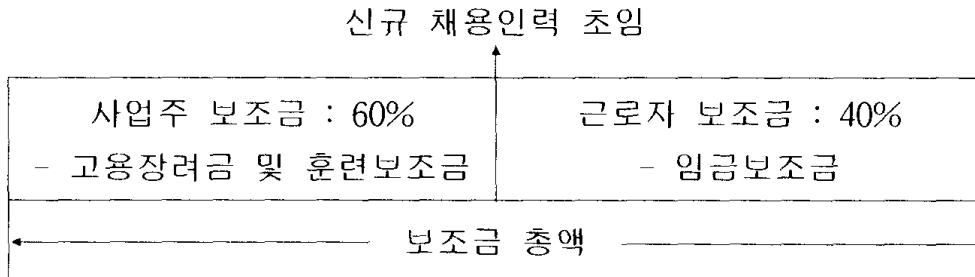
중소기업 취업유도 차원(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보전)에서 근로자 임금보조금 지급,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훈련비용 차원의 임금일부를 지원



- 지급규모 :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당 80~100만원선 보조
  - 근로자 임금보조 : 기업측의 임금외에 보조금 30-50만원 개인별 구좌 임금
  - 사업체 훈련비용 보조 : 매월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50만원선 훈련비 지급
- 지급절차
  - 기업측과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매달 임금대장사본을 담당 구청에 신고
  - 담당 구청은 근로계약 유지 및 사내훈련 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 채용 전 6개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는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제외
- 시나리오 II : 영역별 차등화안
  - 지원대상자 : 서울 거주 경력이 없는 30세미만의 구직자
  - 지원업종 : 중점 산업과 비중점 산업, 100인 이하 업체
  - 운용방식 : 업종과 직종에 따라 임금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3種으로 구분하되, 種별 보조금 차등화와 적정 예산배분
  - 1種 : 중점산업의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 임금보조금으로 근로자보조금 40만원 + 고용장려금으로 사업주보조금 40만원

+ 훈련보조금 20만원 지급

• 예산의 40%를 배정



※ 훈련보조금은 채용인력의 교육훈련을 전제조건으로 지급

- 2種 : 중점업종의 판매직,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임금보조금으로 근로자 보조금 40만원 + 훈련보조금 20만원 지급

• 예산의 30%를 배정

- 3種 : 비중점 업종의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임금보조금으로 근로자 보조금 60만원 + 훈련보조금 20만원 지급

• 예산의 30%를 배정

<표 27> 서울시 고용보조금 도입방안 II

구분	1종	2종	3종
업종특성	중점업종	중점업종	비중점업종
대상 직종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	판매직,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가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보조금액	총액 100만원선 (근로자보조 40 + 사업주보조 40 + 훈련보조 20)	총액 60만원선 (근로자보조 40 + 훈련보조 20)	총액 80만원선 (근로자보조 60 + 훈련보조 20)
예산배정	40% 배정	30% 배정	30% 배정

### 3) 행정지원 체계

#### ○ 고용보조금 제도 모니터링 및 사후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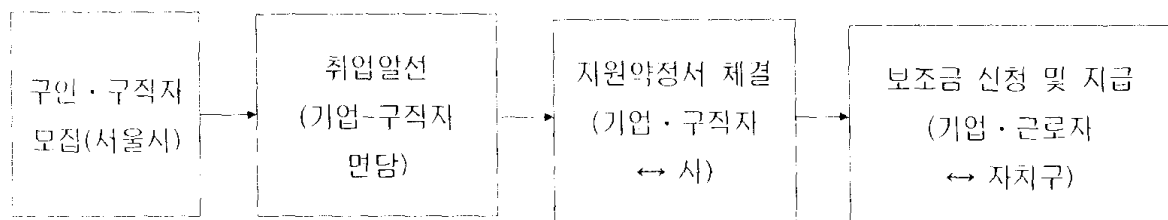
- 서울시 고용안정과

#### ○ 제도 운용은 서울시와 각급 자치구 합동

- 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기업체와의 지원약정 체결은 서울시 고용안정과 담당
- 매월 보조금 신청 접수 및 지급 업무는 사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담당

#### ○ 운용 절차

서대군 주원



○ 상기 운영 절차와 관련하여 취업알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

- 공식적 취업알선 창구를 두지 않는 경우

- 단일한 취업알선 창구를 두지 않고, 자치구의 취업정보센터, 대학별 취업센터, 온라인 사이트 등의 다변화된 창구를 설치하여 제도를 운영함
- 구직자는 각급 취업알선 창구에 신청하여 고용보조금 수급자격을 확인받고, 구인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일괄 서울시에 정보가 취합됨
- 이렇게 취합된 구인-구직 정보를 바탕으로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대학 취업센터,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기업체와 구직자를 연결
- 취업관련 기관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각 구청 등을 통해 지원된 구인업체 정보는 서울시로 취합되어 다시 일선 취업알선 창구로 보내지고, 구직자는 취업알선 창구를 통해 해당 기업에 구직 지원
- 채용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시와 공식적으로 지원약정서 체결
- 전문적인 고용상담원의 취업알선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 고용장려금 고용알선 사업 개최

- 고용보조금 수급자격이 있는 청년층 구직자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1년에 약 2회 가량 고용알선 사업 개최
- 사업 개최를 통해 지원, 면접, 채용, 보조금 지원약정 체결 등이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취업알선을 위한 행정절차와 행정인프라 구축 노력이 경감될 수 있음
- 고용알선 사업의 홍보 성공 여부에 참여율이 결정됨
- 수시 발생하는 사업체의 구인 수요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제약이 존재

○ 업무 협조기관

- 대학 취업센터 및 자치구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고용보조금 제도 홍보및인력 유치

-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제도 홍보 필요
- 기업체 참여제고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업무 협조
- 향후 행정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현재 서울시의 고용안정 관련 행정인프라만으로는 고용보조금 제도의 내실있는 운용이 어려운 실정임
  - 특히 고용보조금 제도는 사후평가 및 감독을 통해 제도의 고용창출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처방이 있어야 함
  - 행정 인프라의 뒷받침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체와 근로자의 부정수급, 순 고용창출 효과를 반감시키는 사중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 4) 예산 소요 계획

- 사업별 차등 예산 배정
  - 대졸 우수인력 중소기업 취업 보조금과 직업전문학교 수료생 취업 보조금에 약 3 : 1의 비율로 예산을 책정
    - 대졸우수인력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약 12백만원 소요
    - 총 예산 중 200억원을 대졸 우수인력 보조금에 집행할 경우 약 1,600명 정도 지원 가능함
    - 직업전문학교 수료생 취업 보조금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년간 약 7.2백만원 소요
    - 총 예산 중 70억원을 집행할 경우 약 900명 정도 지원 가능함
  - 제도 도입기에 운용의 성패는 홍보에 달려 있음. 따라서 제도 홍보비에 과감한 예산 배정이 필요함
- 중장기 예산 소요 계획

- 시기별 예산 소요 계획의 원칙은 제도 도입기에는 보수적인 예산 배정을, 이후 제도 수정 및 확장 단계에서는 보다 신축적인 예산 배정이 요구됨
- 제도 도입기(2005년 상반기까지)의 사업 결과 평가를 토대로 신축적인 예산 배정이 요구됨
- 제도 도입기 이후 모니터링 연구에 예산을 배정하여 이후 제도 운용의 지침으로 활용

## 별첨자료

1. 서울시 업종별(중분류)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
2. 서울시 업종별 임금수준 변화와 임금지수
3. 서울시 직종별 임금수준 변화 및 임금지수
4. 서울의 산업중분류별 부족인원 구성비 순위
5. 서울의 제조업종 인원 부족률
6. 서울의 주요 서비스업종의 인원 부족률
7. 서울의 직업중분류별 인원 부족률

빈 면



별첨 1 : 서울시 업종별(중분류)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

		1995		2000		2002		1995~2002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제조업	농림, 어업 및 광업	209	10,346	89	1,939	83	2,194	-60.29	-78.79
	음·식료품	6,044	47,627	6,258	39,771	7,128	40,343	17.94	-15.29
	담배	1	4	1	3	0	0	-100	-100
	섬유제품	8,147	56,487	7,212	47,597	7,479	42,192	-8.20	-25.31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17,109	145,642	13,547	109,925	13,547	109,759	-20.82	-24.64
	가죽, 가방 및 신발	2,794	20,690	2,084	14,220	1,941	13,672	-30.53	-33.92
	목재 및 나무제품	1,645	5,240	1,029	2,547	860	2,485	-47.72	-52.5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473	17,278	1,073	10,635	1,107	9,380	-24.85	-45.71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1,195	88,008	11,093	80,874	11,015	85,506	-1.61	-2.84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0	2,909	24	4,336	27	4,899	35.00	68.41
	화학물 및 화학제품	866	46,844	887	30,680	939	36,464	8.43	-22.1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085	23,219	1,781	12,458	1,661	11,742	-20.34	-49.43
	비금속광물제품	951	17,099	779	8,792	677	8,503	-28.81	-50.27
	제 1차 금속산업	560	9,676	790	8,108	924	13,598	65.00	40.53
	조립금속제품	7,883	42,212	6,139	22,579	6,709	21,991	-14.89	-47.90
	기타 기계 및 장비	6,998	55,147	6,529	40,124	6,147	37,252	-12.16	-32.45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454	13,650	530	11,768	518	11,223	14.10	-17.7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723	27,699	2,570	18,409	3,016	22,670	10.76	-18.1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516	47,695	1,725	58,815	1,846	51,285	21.77	7.5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369	13,928	1,580	14,056	1,629	14,373	18.99	3.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641	12,689	372	3,871	351	4,804	-45.24	-62.14
도·농·림업	기타 운송장비	116	1,672	144	2,584	104	1,814	-10.34	8.49
	가구 및 기타 제품	6,923	33,433	6,543	25,946	6,382	27,451	-7.81	-17.8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44	209	64	323	36	245	-18.18	17.22
	소계	81,557	729,057	72,754	568,421	74,043	571,651	-9.21	-21.59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43	6,311	183	11,128	183	10,679	27.97	69.21
	건설업	17,161	390,564	16,124	236,694	18,793	208,620	9.51	-46.58
	도매 및 소매업	255,631	940,462	237,985	816,594	229,690	806,331	-10.15	-14.26
	숙박 및 음식점업	110,787	323,620	116,758	362,912	121,801	392,784	9.94	21.37
	운수업	71,458	226,616	80,757	231,463	89,383	256,939	25.08	13.38
	통신업	699	21,920	1,805	38,719	1,937	49,574	177.11	126.16
사업서비스업	금융업	3,972	102,850	4,397	80,256	4,641	104,544	16.84	1.65
	보험 및 연금업	3,075	110,531	2,071	74,309	1,662	78,467	-45.95	-29.01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827	36,275	2,183	44,747	2,246	44,013	171.58	21.3
	소계	7,874	249,656	8,651	199,312	8,549	227,024	8.57	-9.07
	부동산 및 임대업	27,849	115,303	28,470	109,194	30,608	119,103	9.91	3.30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1,373	28,981	5,831	105,054	6,370	119,161	363.95	311.17
	연구 및 개발업	469	8,842	607	14,387	692	16,010	47.55	81.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094	147,592	17,770	137,348	19,557	157,740	29.57	6.88
	사업지원 서비스업	2,700	44,527	28,117	319,769	31,719	435,898	61.53	89.57
	소계	19,636	229,942	52,325	576,558	58,338	728,809	197.10	216.9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16	109,137	1,454	98,843	1,437	108,119	-5.21	-0.93
	교육 서비스업	21,091	171,095	20,422	195,579	21,568	215,570	2.26	25.9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748	101,828	14,831	123,551	15,540	136,254	32.28	33.8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2,247	74,073	27,728	92,040	26,122	93,012	17.42	25.5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8,419	174,667	63,408	168,666	63,802	171,710	9.21	-1.69
합계		708,025	3,874,597	719,536	3,574,824	735,258	3,805,462	3.85	-1.78

## 별첨 2 : 서울시 업종별 임금수준 변화와 임금지수

월급여액	1993	1995	2000	2002	임금지수	93-02	00-02
전산업	757007.3	927891.2	1313910.2	1532750	100	102.5	16.7
농업 수렵업 및 임업(01-02)			1301286.5	1508525	98.4	-	15.9
어업(05)			1419443.2	1333213	87.0	-	-6.1
광업(10-14)	843950.7	988688.9	1340838.9	1586247	103.5	88.0	18.3
제조업(15-37)	700684.1	868843.3	1227832	1458006	95.1	108.1	18.7
음식료품 제조업	653404.5	793328.5	1168972.2	1343237	87.6	105.6	14.9
담배제조업	1005151.8	1172229.6	2010704.9	2468235	161.0	145.6	22.8
섬유제품 제조업	616343.3	759904.5	1065730.5	1285887	83.9	108.6	20.7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525221.9	660980.5	967830.5	1137529	74.2	116.6	17.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50786.3	761306.5	1075782.3	1212624	79.1	120.2	12.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698525	882306.5	1142318.6	1424983	93.0	104.0	24.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56313.3	926953.5	1305049.9	1479308	96.5	95.6	13.4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17422.8	887988.1	1344768.7	1544102	100.7	115.2	14.8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118750.2	1309131.9	1811556.1	2104441	137.3	88.1	16.2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66579.5	933973.4	1475636.3	1744727	113.8	127.6	18.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695951.2	885809.8	1181984.3	1375112	89.7	97.6	16.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85836	962176.6	1345476.3	1486971	97.0	89.2	10.5
제1차 금속산업	850873.7	1053767.2	1364285.9	1597996	104.3	87.8	17.1
소립금속제품 제조업	715469	856034.7	1178238	1409693	92.0	97.0	19.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76235	947610.1	1260673.8	1496242	97.6	92.8	18.7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620523.8	790257.4	1144081.5	1529494	99.8	146.5	33.7
미분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670855.1	793032.2	1117871.3	1318237	86.0	96.5	17.9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05183.6	804077.9	1184974.4	1484561	96.9	145.3	25.3
의료, 성문,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40585.7	793797.7	1258908.7	1390168	90.7	117.0	10.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17982.2	976348.1	1324395.8	1571632	102.5	92.1	18.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08924.6	1168413.6	1460291.7	1786999	116.6	96.6	22.4
가구 및 기타 제조업	626540.1	778723.2	1064685.9	1225093	79.9	95.5	15.1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685150	927208.9	1287060.2	1334140	87.0	94.7	3.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	1003155	1125849.7	1771358	2360135	154.0	135.3	33.2
건설업(45)	935011	1110424.2	1420414.7	1599521	104.4	71.1	12.6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50-52)	735988	880657	1285381.4	1548942	101.1	110.5	20.5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715316	860404	1138236.3	1532685	100.0	114.3	34.7
도매 및 상품 중개업	779929	917099.9	1426447.1	1658489	108.2	112.6	16.3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산업	651076	814398	1120803.7	1339388	87.4	105.7	19.5
숙박 및 음식점업(55)	631822	823274.8	980644.9	1106879	72.2	75.2	12.9
운수, 창고 및 통신업(60-64)	768107	938275.1	1391990.8	1407757	91.8	83.3	1.1
육상운송 및 피이프라인 운송업	761202	918062.5	1227097.8	1345765	87.8	76.8	9.7
수상 운송업	842445	1024463.8	1508477.8	1656695	108.1	96.7	9.8
항공 운송업	1008876	1352087.7	1881620.5	2043111	133.3	102.5	8.6
여행양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60657	744598.9	1344666.2	1459267	95.2	120.9	8.5
통신업	875789	1188830.4	2095572.7	2482465	162.0	183.5	18.5
금융 및 보험업(65-67)	901126	1114926.7	1589429.2	1945798	126.9	115.9	22.4
금융업	905656	1133356.6	1610079.1	1921464	125.4	112.2	19.3
보험 및 연금업	853104	1016839	1475054.2	1770924	115.5	107.6	20.1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991640	1215432.2	1800070.6	2355600	153.7	137.5	30.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70-74)	706780	879720.3	1232583.5	1945798	126.9	175.3	57.9
부동산업	643448	779019.4	933813.7	1017959	66.4	58.2	9.0
기계장비 및 소비자용품 임대업	1087791	1176799.9	1281210.2	1743499	113.7	60.3	36.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940305	1194976.4	1663123.5	2059429	134.4	119.0	23.8
연구 및 개발업	1040904	1329800.5	2174840.1	2577197	168.1	147.6	18.5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639184	824912.8	1151805.8	1768918	115.4	176.7	53.6
교육 서비스업(80)	1151038	1334427.3	1566200.1	1753537	114.4	52.3	12.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	753706	881584.3	1455976	1454312	94.9	93.0	-0.1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90-93)	904976	1060122.7	1302619.2	1381555	90.1	52.7	6.1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761558	858841.5	1214056	1477022	96.4	93.9	21.7
회원단체	791951	946166.2	1406246.1	1538094	100.3	94.2	9.4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086568	1188552.5	1352610	1384678	90.3	27.4	2.4
기타 서비스업	571689	772121.6	983236.3	1102990	72.0	92.9	12.2

업종	1993	1995	2000	2002	임금지수	93-02	00-0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	1003155	1125849.7	1771358	2360135	154.0	135.3	33.2
전기, 가스 및 증기업	1008181	1122384.4	1760507.8	2357566	153.8	133.8	33.9
수도사업	822175	1297420.8	2098277.9	2406540	157.0	192.7	14.7
건설업(45)	935011	1110424.2	1420414.7	1599521	104.4	71.1	12.6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50-52)	735988	880657	1285381.4	1548942	101.1	110.5	20.5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715316	860404	1138236.3	1532685	100.0	114.3	34.7
도매 및 상품 중개업	779929	917099.9	1426447.1	1658489	108.2	112.6	16.3
소매 및 소비용품 수산업	651076	814398	1120803.7	1339388	87.4	105.7	19.5
숙박 및 음식점업(55)	631822	823274.8	980644.9	1106879	72.2	75.2	12.9
운수, 창고 및 통신업(60-64)	768107	938275.1	1391990.8	1407757	91.8	83.3	1.1
육상운송 및 피이프라인 운송업	761202	918062.5	1227097.8	1345765	87.8	76.8	9.7
수상 운수업	842445	1024463.8	1508477.8	1656695	108.1	96.7	9.8
항공 운송업	1008876	1352087.7	1881620.5	2043111	133.3	102.5	8.6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60657	744598.9	1344666.2	1459267	95.2	120.9	8.5
통신업	875789	1188830.4	2095572.7	2482465	162.0	183.5	18.5
금융 및 보험업(65-67)	901126	1114926.7	1589429.2	1945798	126.9	115.9	22.4
금융업	905656	1133355.6	1610079.1	1921464	125.4	112.2	19.3
보험 및 연금업	853104	1016839	1475054.2	1770924	115.5	107.6	20.1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991640	1215432.2	1800070.6	2355600	153.7	137.5	30.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70-74)	706780	879720.3	1232583.5	1945798	126.9	175.3	57.9
부동산업	643448	779019.4	933813.7	1017959	66.4	58.2	9.0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1087791	1176799.9	1281210.2	1743499	113.7	60.3	36.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940305	1194976.4	1663123.5	2059429	134.4	119.0	23.8
연구 및 개발업	1040904	1329800.5	2174840.1	2577197	168.1	147.6	18.5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639184	824912.8	1151805.8	1768918	115.4	176.7	53.6
교육 서비스업(80)	1151038	1334427.3	1566200.1	1753537	114.4	52.3	12.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	753706	881584.3	1455976	1454312	94.9	93.0	-0.1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90-93)	904976	1060122.7	1302619.2	1381555	90.1	52.7	6.1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761558	858841.5	1214056	1477022	96.4	93.9	21.7
회원단체	791951	946166.2	1406246.1	1538094	100.3	94.2	9.4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086568	1188552.5	1352610	1384678	90.3	27.4	2.4
기타 서비스업	571689	772121.6	983236.3	1102990	72.0	92.9	12.2

### 별첨 3 : 서울시 직종별 임금수준 변화 및 임금지수

업종	2000	2001	2002	00-02	임금지수
전직종	1313910.2	1393059	1532750	16.7	10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	2312210	2456280	2641750	14.3	172
행정 및 경영관리자 (02)	2420219.3	2534135	2756720	13.9	180
일반관리자 (03)	2148422.6	2360845	2493837	16.1	163
전문가 (1)	1786016.9	1920172	2052085	14.9	134
과학 전문가 (11)	2454019.5	2507598	2704316	10.2	176
컴퓨터관련 전문가 (12)	1942407.6	1969817	2218011	14.2	145
공학 전문가 (13)	1765184.1	1923040	2192027	24.2	143
보건의료 전문가 (14)	1718146.4	1835528	1825829	6.3	119
교육 전문가 (15)	1743136.3	1817210	1871518	7.4	122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16)	2234115.1	2506575	2776917	24.3	181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17)	1681346.1	1693548	1834776	9.1	120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18)	1459647.2	1650934	1739713	19.2	114
기술공 및 준전문가 (2)	1491265.2	1598285	1766506	18.5	115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1)	1501951.7	1725929	2072312	38.0	135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22)	1312366.6	1470037	1648076	25.6	108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23)	1390419.5	1480698	1686620	21.3	110
보건의료 준전문가 (24)	979688.8	1041518	1125300	14.9	73
교육 준전문가 (25)	1156299.1	1172564	1274461	10.2	83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26)	1635336.2	1795379	2109048	29.0	138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27)	1115858.5	1172941	1155630	3.6	75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28)	1300421.1	1250342	1371005	5.4	89
기타 준전문가 (29)	1786623.2	1865965	2100092	17.5	137
사무 종사자 (3)	1170980.2	1223283	1429125	22.0	93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31)	1183420.6	1231291	1446101	22.2	94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32)	1092753	1164806	1297765	18.8	85
서비스 종사자 (4)	1011927.2	1053515	1101971	8.9	72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41)	961323.9	1042533	1077220	12.1	70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42)	946333.3	980587	1035141	9.4	68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43)	1072188.6	1250160	1344225	25.4	88
보안 서비스 종사자 (44)	1549300.1	1612228	1675755	8.2	109
판매 종사자 (5)	988856.1	1028279	1310968	32.6	86
도소매 판매 종사자 (51)	984373.9	1027954	1311342	33.2	86
통신 판매 종사자 (52)	1349299	1438700	1360253	0.8	89
모텔 및 홍보 종사자 (53)	707135.5	924763	1041349	47.3	68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6)	1079768	1129236	1317577	22.0	8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	1203854.7	1279732	1397597	16.1	91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71)	1305320.3	1374690	1419484	8.7	93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2)	1247900.2	1309813	1503621	20.5	98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73)	1362511.8	1442697	1584592	16.3	103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74)	1151173.1	1164278	1281611	11.3	8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5)	869020	897725	1067582	22.8	7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	1169522.7	1228260	1356223	16.0	88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81)	1329141.3	1424939	1559606	17.3	102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82)	1113614	1173576	1332338	19.6	87
조립 종사자 (83)	1001740.3	1074608	1246756	24.5	81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84)	1272240.3	1325626	1381823	8.6	90
단순 노무 종사자 (9)	810260.2	818587	918251	13.3	60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1)	756486.1	775656	834592	10.3	54
농림어업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2)	735855.3	873677	867567	17.9	57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3)	862802.3	872773	1004185	16.4	66
광업, 건설 및 운송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4)	1174106.4	1170905	1189813	1.3	78

별첨 4 : 서울의 산업중분류별 부족인원 구성비 순위: 2003년

[단위: %]

구 분	순위	부족인원 구성비	부족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1	40.8	10.70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2	6.4	0.40
도매 및 상품중개업	3	5.2	0.77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4	4.3	0.59
연구 및 개발업	5	4.1	2.32
소매 및 소비용품수산업	6	4.0	1.59
조립금속제품제조업	7	3.9	3.21
숙박 및 음식점업	8	3.4	0.6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9	3.2	0.96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	3.0	0.64
통신업	11	2.8	1.07
건설업	12	2.3	0.48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13	1.7	2.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1.7	1.24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5	1.2	1.94

출처: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원자료, 2003

별첨 5: 서울의 제조업종 인원 부족률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음식료품	1.31	0.04	0.43	0.97	0.33
담배	0.00	0.00	0.00	0.00	0.00
섬유제품	0.83	0.83	0.29	1.81	0.36
의복 및 모피제품	1.16	1.66	1.33	1.76	0.96
가죽가방, 마구류 및 신발	0.66	2.03	2.53	2.18	1.70
목재 및 나무제품	0.00	0.00	0.00	0.00	0.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21	1.08	0.38	1.81	2.2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0.32	0.47	0.42	1.61	0.64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3	1.32	0.11	0.11	0.00
화합물 및 화학제품	0.18	0.13	0.05	0.59	0.4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13	0.47	0.42	3.04	2.01
비금속광물제품	0.29	1.95	0.33	0.35	0.30
제1차 금속산업	0.11	0.45	0.00	1.65	0.49
조립금속제품	0.45	1.23	0.74	3.52	3.21
기타 기계 및 장비	0.35	0.91	0.87	0.86	1.24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0.36	1.21	0.90	1.87	2.1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10	0.68	2.10	2.22	0.64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29	4.57	0.16	1.13	0.4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75	0.96	0.00	3.20	1.06
자동차 및 트레일러	0.00	0.12	0.79	0.00	0.00
기타 운송장비	0.00	0.00	0.00	0.83	0.00
가구 및 기타	1.41	3.57	0.73	4.88	1.94
재생재료 가공처리	0.00	6.25	0.00	50.00	0.00
전체 제조업	0.58	0.81	0.50	1.14	0.79

출처: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별첨 6: 서울의 주요 서비스업종의 인원 부족률

[단위: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육상운송업	1.98	2.90	1.68	7.19	10.70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0.68	0.23	0.32	0.70	0.07
통신업	0.13	0.25	0.03	0.44	1.07
금융업	0.00	0.07	0.21	0.14	0.01
보험 및 연금업	0.04	0.52	0.00	0.29	0.01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3.66	1.22	0.00	0.69	0.16
부동산업	0.20	0.13	0.25	0.30	0.63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59	1.55	0.51	2.52	1.59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0.73	1.44	0.92	2.07	0.59
연구 및 개발업	0.13	3.07	0.22	1.32	2.32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0.13	0.33	0.22	0.68	0.40
교육서비스업	0.03	0.26	0.28	0.36	0.1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22	0.39	0.10	0.14	0.03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01	0.89	0.27	0.73	0.43
회원단체	0.02	0.80	0.82	0.94	0.3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0.15	0.25	0.38	0.26	0.09
기타 서비스업	0.41	0.00	1.64	2.87	0.00

출처: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별첨 7: 서울의 직업중분류별 인원 부족률

[단위: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임법, 고위정부공무원	0.00	0.00	0.00	2.22	0.00
법인관리자	0.07	0.14	0.09	0.34	0.27
종합관리자	0.11	0.09	0.14	0.15	0.30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0.35	1028	0.62	1.22	0.68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0.16	0.58	0.01	0.09	0.17
교육전문가	0.00	0.29	0.52	0.42	0.05
기타 전문가	0.11	0.15	0.53	0.30	0.24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0.30	0.70	0.26	0.81	0.44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0.17	0.17	0.26	0.29	0.02
교육 준전문가	0.51	0.10	0.35	0.91	0.68
기타 준전문가	0.62	0.52	0.32	0.64	0.21
일반 사무직원	0.35	0.53	0.56	0.68	0.42
고객봉사 사무직원	1.68	0.95	0.57	0.82	0.28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0.09	0.66	0.36	2.15	0.47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0.61	0.69	0.86	2.18	1.42
축학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3.38	2.01	1.71	0.00	0.38
주축 및 건축 기능근로자	0.59	0.11	0.47	1.81	0.89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0.25	1.74	0.50	0.75	1.11
정밀, 수공업, 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1.43	1.29	1.39	6.39	0.82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2.01	4.34	2.64	3.89	2.38
고정장치 및 관련 조직원	0.09	1.43	0.19	0.40	0.26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1.00	3.27	0.70	4.13	1.58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직원	1.85	2.55	1.65	6.40	9.05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0.19	0.22	0.11	0.62	0.70
농림어업 관련 단순 노무자	0.00	0.00	0.00	0.00	0.00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1.67	0.60	0.62	4.04	0.93
합 계	0.48	0.81	0.50	1.14	0.79

출처: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